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정연구기관, KINU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1/3년차)

KINU 연구총서 24-07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김상기 | 김강석
이기태 | 최윤정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연구책임자

김상기(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강석(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조교수)

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윤정(세종연구소 부소장)

KINU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1/3년차) KINU 연구총서 24-07

발행일 2024년 12월 30일
저자 김상기, 김강석, 이기태, 최윤정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현대아트컴(02-2278-4482)
ISBN 979-11-6589-180-0 93340
가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2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9

Chapter I

서론 13

Chapter II

미중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21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운 전략환경의 등장 23
2. 미중 전략경쟁이 유럽, 중동, 인도에 미치는 영향 32

Chapter III

유럽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43

1. 유럽의 지역정세 현황 및 국제질서변화 인식 45
2. 유럽의 대외정책 기조 60
3. 유럽의 각 현안별 대응 66

Chapter IV

중동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 71

1. 중동의 지역정세 현황 및 국제질서변화 인식 ————— 73
2. 중동의 대외정책 기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사례 ————— 84
3. 중동의 각 현안별 대응 ————— 92

Chapter V

인도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 101

1. 인도의 지역정세 현황 및 국제질서변화 인식 ————— 103
2. 인도의 대외정책 기초 ————— 112
3. 인도의 각 현안별 대응 ————— 123

Chapter VI

결론: 한반도에 대한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135

참고문헌 ————— 152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61

Tables

표 차례

〈표 Ⅲ-1〉 EU와 NATO 회원국 현황	47
〈표 Ⅲ-2〉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51
〈표 Ⅳ-1〉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중 선호도 여론조사	82
〈표 Ⅳ-2〉 아랍 청년들의 비아랍 국가에 대한 인식 (2022년 Arab Youth Survey)	83
〈표 Ⅳ-3〉 미국의 탈중동 정책에 대한 아랍 청년들의 인식 (2022년 Arab Youth Survey)	84

Figures

그림 차례

〈그림 III-1〉 미국의 중국에 대한 GDP 및 군사비 비율	55
〈그림 IV-1〉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	88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본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속에서 유럽, 중동, 인도에서의 한국의 통일외교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과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우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러-우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중동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장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통일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유럽, 중동, 인도와 같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글로벌 중추국가, 유럽, 중동, 인도, 통일외교



Analysis of the Unification Diplomacy Environment of South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Europe, Middle East, and India

Kim, Sang Ki et al.

This report aims to analyze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environment in Europe, the Middle East, and India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2010s. The rapidly changing global situation, such as the 2022 Ukraine War and the 2024 Israel– Hamas War, calls for cooperation not onl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with various regions and nations. This study focuses on accurately understanding South Korea's diplomatic environment for unification while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global pivotal state.”

The Ukraine war has intensified the confrontation between NATO and Russia, significantly affecting Europe's security

and economy. In the Middle East, the Israel– Hamas war and Iran’s international role have become more prominent,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chains and maritime routes. India is maintaining its non–alignment policy amidst the U.S.–China conflict, while increasing its strategic importance.

In particular, the Ukraine War and the Israel– Hamas War are having a profound impact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economy, present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y. The Ukraine War has caused instability in energy and food supply chains, increasing economic uncertainty globally.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and security, which could directly affect South Korea’s economy and security.

The report suggests that as South Korea pursues unification diplomac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gions such as Europe, the Middle East, and India, and to establish a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y that promotes peace and prosperity in these areas. By doing so, South Korea can play a more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cure global suppor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Global Pivotal State, Europe, Middle East, India, Unification Diplomacy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대만의 새로운 총통 취임과 함께 중국의 대만 해협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변국 관계에 관한 국내외 관심 증가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즉 기존에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이라는 구조에 천착하면서 한국과 주변국 간의 양자외교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다. 하지만 세계 질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질서변화는 단순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및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다자협력을 위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중, 미러와 같은 강대국 간 갈등은 다른 지역 및 국가, 즉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지역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두 전략과 구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및 국가들은 미국, 중국의 어느 한쪽에 경도되거나(전략적 명료성), 혹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전략적 모호성) 등 자신의 지역 질서를 감안한 외교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폭넓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지역 및 국가들의 우호적인 대한민국 통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심의 연구에 치우친 나머지 한반도 주변 이외의 지역 및 국가들에 대한 최신 국제질서 인식 및 외교 전략 추진 현황 및 환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한국은 ‘통일 외교’ 전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 각 지역 및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대한민국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과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즉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3개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1년차에는 유럽, 중동, 인도 지역의 국제질서 인식과 세계전략을 알아보고 이들 지역, 국가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통일외교를 위한 전략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2년차에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지역의 국제질서 인식과 세계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3년차에는 1년차, 2년차에서 연구한 지역의 역학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러-우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럽,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이슬람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며,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 및 협력이 공존하면서 여전히 비동맹 세력의 맹주임을 자임하고 있는 인도라는 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세 지역 및 국가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질서변화에서 주목되는 유럽, 중동, 인도라는 ‘지역’ 확장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포함한 ‘세대’ 확장,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국제공헌’ 확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기후변화 등 신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한반도의 안정이 곧 해당 지역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비전과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인도 분쟁을 통해 해당 지역 분쟁이 곧 한반도의 안정에 직결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에게도 한반도의 평화로운 안정 및 통일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됨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1차년도에 해당되는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유럽, 중동, 인도의 국제질서 인식 및 역학 관계를 분석한다. 즉 이러한 지역 및 국가의 대미/대중 전략 분석을 통해 친미 혹은 친중, 중립적 입장 여부를 분석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른 역학관계 인식 및 전략 방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각 지역 및 국가별 전통외교, 즉 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및 국가의 국제질서 인식과 세계전략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추진하는 데 먼저 확인해야 할 각 지역 및 국가의 통일외교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유럽의 국제질서 인식과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 NATO) 진영과 러시아, 벨라루스 등과의 대립 양상이 두드러졌다. 러-우 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NATO의 세력 확대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 저지 상황에서

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국제질서변화 인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NATO의 입장 분석 및 유럽 국가들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개에 따른 구체적 정책 역시 분석한다. 유럽의 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세계전략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제질서 인식과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2023년 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 및 무장 단체와의 대립 양상이 격해지고 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곧이어 이스라엘의 사상 첫 이란 본토 공격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급진 무장 단체 헤즈볼라와의 전쟁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중동 지역의 급박한 정세변화에 따라 중동 지역이 갖는 중요성, 즉 전 세계적 원유 공급망 및 해상수송로(sea lane) 확보 문제 등에 따른 국제질서변화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동 지역의 핵심국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는 미중의 전략경쟁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특히 이란은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으며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이며, 북한과 핵무기 개발 및 무기거래에서 많은 의혹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이란의 국제질서 인식 및 세계전략을 분석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향후 중동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동 통일외교 전략 추진을 위한 환경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국제질서 인식과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영토 분쟁 및 여러 분야에서의 경쟁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비동맹, 중립 정책을 취해왔던 인도는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다. 한국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모두 인도를 주목하였고, 특히 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부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인도 통일 외교 전략 추진을 위한 환경 분석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심이 아닌 다른 지역 및 국가와 한반도 관계를 분석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대한반도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중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북·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질서변화에 수동적인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가 아닌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주도형 국가(leading state)’로서의 한국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북 및 통일 정책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II. 미중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중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운 전략환경의 등장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세계는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부터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였다.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에 의해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이니 군사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군사비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군사력이 중요했고, 세계는 힘으로 움직였다.

중국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했고,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1994년 제1차 체첸 전쟁, 1999년 제2차 체첸 전쟁, 2008년 조지아 전쟁,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공습까지 푸틴은 대통령이 된 이후 20년 가까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서구 진영은 유럽 통합과 세계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생산기지를 중국과 러시아로 속속 이전하고 있었다. 유럽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되었고, 독일은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자원을 러시아 한 나라에 의존하게 되었다. 즉, 서구 진영은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을 잘못 인식하였던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은 단순히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간 무력 충돌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로 변화한 세계사적 대전환점을 의미한다. 냉전 시기는 미국,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양극 시대였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 일국의 단극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국력을 크게 잃었고,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여론은 과도한 국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이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후퇴는 자유민주주의의 규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강대국들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불안정 시대가 진행되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지만, 여전히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무력 행사는 최근에도 조지아 분쟁(2008년), 크림반도 합병(2014년), 시리아 개입(2015년) 등 무수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국가의 정권 전복과 점령을 목적으로 한 침략 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질서파괴적이었다.

현대 국제안보질서의 전제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명시된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과 무력 행사를 자제하는 데 있다.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예외는 유엔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유엔 헌장 제7장의 집단적 안보에 한정된다.

이러한 기본 규칙을 어기고 다른 나라를 공공연하게 침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질서의 전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공개적인 무력 사용이 오히려 이득을 창출하고 페널티(penalty)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질서의 전제는 무너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안보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종결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러-우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는 무력 침략에 대한 억지력과 억지 실패의 교훈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현대 전쟁의 승패, 이득과 손실의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침략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안보질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역사적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처벌 없이 추인하느냐에 따라 안보질서의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이 모두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중장기 국제안보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러-우 전쟁의 종결에는 ① 협상을 통한 양측의 휴전 및 평화 합의, ② 어느 한쪽의 군사적 승리(또는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 의한 종결, ③ 소모와 전쟁 혐오로 인한 전투 유지 능력 상실에 의한 휴전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다. 일본의 국제정치학자인 치지와 야스아키(千々和泰明)가 ‘전쟁종결의 이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타협적 평화’와 ‘분쟁원인의 근본적 해결’에는 딜레마가 발생하기 쉽다.^{1/}

1/ 千々和泰明氏, “戦争終結の理論: 平和の回復をめぐるジレンマ,” 『国際政治』, 第195号 (2019), pp. 59~74.

전자의 경우, 조기 타협적 평화는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희생을 줄일 수 있지만, 그사이 우세한 세력의 우위를 확정하고 미래의 위험(당사국의 추가 주권 침해와 국제안보질서 악화)을 증가시킬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조기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러시아가 침략을 통해 획득하고 지배한 지역의 현상유지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침략전쟁의 이득을 인정하는 태도와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후자의 분쟁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즉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한 국토를 회복(2022년 2월 24일 이전 상황으로 복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지속하여 전황을 타개하고 동남부 지역의 실효적 지배권을 재획득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소모율을 높여 조직적 전투능력을 저하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국가로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막대한 인적-물적-경제적 손실을 수반할 것이다.^{2/}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다.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 소비와 생산 활동은 위축됐지만, 수출의 핵심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GDP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역사적으로 실패로 자리매김하고,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권리를 지지하고, 그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체력을 빼앗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해법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 千々和泰明氏, “戦争終結の理論: 平和の回復をめぐるジレンマ,” pp. 64~6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이후 세계에 평화와 안정, 번영을 가져다준 다자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기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역사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비인도적 무력 사용으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 언급 등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체도로 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다자주의는 전례 없는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7(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선진국의 모임을 지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 NATO) 등은 단결하여 러시아를 비난하고, 자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각오하고 고강도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다자주의의 상징적 존재로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의 군사행동을 멈출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면서도 유엔 총회 긴급 특별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인 141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비난 결의안에 찬성하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3/}

한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결의안에 40개국이 반대 및 기권한 현실이다. 기권한 35개국에는 G20의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된다.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고, 현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대표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즉, 전쟁의 참화 앞에서도 ‘세계 공동의 이익’보다 ‘각국의 개별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다자간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

3/ 이본영, “유엔총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 압도적 통과,” 『한겨레』, 2022. 3.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3289.html> (검색일: 2024.10.31.).

들고 있다. ‘다자주의의 교착상태’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점은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다자간 틀에서의 이탈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등을 통해 제기되어 온 다자주의의 과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이러한 다자주의 약화의 틈새를 파고들어 신흥국/개발도상국을 끌어들이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표방하며 ‘중국의 특색 있는 다자주의’를 가속화하여 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로 UN의 국제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국제기구의 요직을 맡고 있는 중국인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 ‘일대일로’, ‘아시아투자은행’ 등을 통해 ‘중국 특색’의 다자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부채의 함정’으로 문제시된 ‘일대일로’를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개발 구상(GDI)’이라는 UN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을 하겠다는 매력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이러한 중력의 도전은 이른바 ‘경쟁적 다자주의(contested multilateralism)’를 심화시키며 기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다자주의를 분열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분단을 가속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4차 산업사회 도래에 따른 첨단기술의 표준화 및 연결성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경쟁이 있다. 냉전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마저도 ‘무기’가 되었다. 지리적 공간도 우주, 사이버 공간으로, 안보의 저변도 경제,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바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시대의 다자주의 전환기에 있다. 무엇보다 기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다자주의를 분열시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열쇠는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 모든 다자주의에 선택적으로 찬동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접근 방식에 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월에 열린 다보스 회의에서는 ‘세계의 분열’이 하나의 주제로 다뤄졌는데, 그중 글로벌 사우스의 입지가 초점이 되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나 범위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진하거나 개발 여력이 제한된 국가군을 지칭하며, 냉전 후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확산되었다. 대부분 식민지를 경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로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고 현대 자본주의 세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아우르는 집합적, 탈국가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4/}

지금 글로벌 사우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개발도상국이라는 틀을 넘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면에서 2050년까지 명목 GDP 합계가 미국, 중국을 능가하는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면에서도 2023년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고, 2050년에는 글로벌 사우스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5/}

또한, 글로벌 사우스는 러-우 전쟁 이후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늘려나가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실시된 대러시아 비난 결의안에서 주권, 영토 등 근본

4/ 최윤정,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세종정책브리프』, 제18호 (세종연구소, 2023.12.21.), p. 5,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3&itm=&txt=&pg=1&seq=7499>> (검색일: 2024.8.20.).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 구축에 힘 쏟는 일본,” 2023.12.1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2&pNttSn=210285> (검색일: 2024.10.31.).

원칙에 관한 투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과반수가 ‘찬성’하기도 했지만, ‘기권’ 혹은 ‘무투표’를 선택한 국가들도 많았다. 또한 자격정지나 배상과 같이 더 한 걸음 나아간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1국가 1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 투표에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의견은 더욱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일부 국가들은 서방 진영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대러 경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득을 추구하려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경제 성장에 전념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에너지 연료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 배경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경제와 정치 양 측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미국,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진영 양측 모두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양 진영의 정상 및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방문하고 있지만, 서구 가치관(서구식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한 반발과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초대받지 못한 국가들의 반발이 나오는 등 개최의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것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 감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스스로도 존재감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2023년 1월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보이스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120여 개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바라보면서 국제질서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중립 진영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G7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국제문제 해결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유엔 결의안 투표 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나 중남미 지역은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다.⁶⁾

글로벌 사우스의 서방 진영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면 탈탄소, 인권 문제와 같이 서방 진영이 주도해 왔던 정책 아젠다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⁷⁾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서방 진영에게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새로운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를 서방의 대러 정책에 참여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과도한 분열을 막는다는 관점도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양국과 경제 관계가 깊어 분열이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관점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 향후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규모가 확대될 것이고,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서방 진영의 기업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인도와 아세안 시장의 향후 성장성이다.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 구축에 힘쓰는 일본.”

7) 위의 글.

경제 관계 구축은 중요 물자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요 물자의 중국, 러시아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요 물자의 중국, 러시아 의존도를 탈피하는 데 있어 글로벌 사우스는 유망한 대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물자의 공급망 재구축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흐름이며, 대체 조달처가 경쟁할 위험이 있다. 이미 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분야가 에너지, 자원 분야이다. 탈러시아를 표방하는 유럽은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늘릴 방침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향후 공급처가 경쟁하는 가운데 중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미중 전략경쟁이 유럽, 중동, 인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국제질서의 세력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이다. 미중은 군사, 경제, 기술 분야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냉전 시기 미소 대립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8/}

8/ 미중 전략경쟁 이후 국제질서변화를 국제정치이론(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향후 20~30년 동안 미국이 중국보다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유지될 수 있어 미국 패권의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21세기 중반 이후는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예단하기 어려워, 미국이 군사적으로 앞서는 기간 동안 어떠한 대중 전략을 구사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향후 국제질서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패권 약화와 미중 전략경쟁에도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 간의 규범적 협력이 미래 국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라고 본다. 패권 국가인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미중 전략경쟁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중 사이의 무역분쟁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무역 제한 조치로 인해 양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디커플링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기술 분야의 경쟁 역시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5G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미중 경쟁은 글로벌 차원의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중국 화웨이사는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테크노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양자컴퓨터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 분야의 현대화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더욱 강화된 자유주의 질서와 다자협력이 현재의 질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다자주의 규범에 기초하며, 이에 기반한 집합 정체성이 국제질서 유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정립한 자유주의 질서의 규범적 측면을 급속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의 관념적 기초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향후 국제질서 재편의 관건으로 본다. 통일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편, 『질서의 충돌, 움직이는 패권』 (서울: 박영사, 2022), pp. xvi~xvii.

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 간 군사적 균형이 역전될 가능성 제기와 함께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지역까지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기존에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과 미중 전략경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럽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EU는 국제적 영향력과 경제 규모 측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에서 EU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많은 EU 소속의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EU 내 핵심국가인 독일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하지만 미중 간에 경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럽은 양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은 중국의 패권적 행보를 경계하고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응하면서도 중국과 단절적인 관계가 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접근을 중시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유럽의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현실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모색하지만, NATO를 비롯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어렵도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NATO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각국은 국방 정책을 강화하였고, NATO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되었다.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 동아시아의 남중국해, 대만해협 위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유럽에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는 최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각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럽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에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한 유럽의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유럽 내부의 군사력 강화 및 상호 국방 협력을 통해 유럽 자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추진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 더 나아가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경제적 팽창을 경계하고 있지만,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내 일부 분열 요소도 존재한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은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심지이며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미중은 그동안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 경쟁을 벌여왔다. 또한 중동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요소와 함께 종교, 종족,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며, 이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영향력 경쟁을 벌이면서 복잡한 긴장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중동은 원유와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이자 미중의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한 지역이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중동의 안정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 및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며 원유 공급을 위한 해상수송로 확보 및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냉전 시기에 중동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었고, 대표적으로 걸프전(1990~1991년) 개입 등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동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중동 지역의 핵심국가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산유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다.

미중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점차적으로 미국 국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이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이를 통해 에너지 수출국 지위를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국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원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이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중동 지역 내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

을 가진 국가이다. 하지만 이란의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 지원과 핵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및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사이에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가 체결되었으나, 2018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함께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이란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관여하고 있고,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감시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지역이며, 이란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중동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원유산업의 핵심이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두 국가의 동맹관계는 중동 지역의 원활한 원유 공급과 지역 안보를 유지시켰고, 미국은 무기공급국으로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요한 국가이다.

한편, 중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요한 원유 공급원이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계획에서도 중요한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관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역시 강화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결국 중동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 양상은 앞으로 중동 지역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중동에서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중동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중동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및 무역 확대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즉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억제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중동 지역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등 지역 강대국 간 대립과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이 맞물리면서 중동 지역 내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고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전략은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중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도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인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및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중국과 함께 ‘세계의 공장’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국으로부터 이전하려는 장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인도는 중국의 대체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기업들에게 인도에서 제조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인도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인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경제의존도가 높지만, 양국 간 교역은 인프라 정비와 물류 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균형 잡힌’ 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악사이친(Aksai Chin)’ 지역과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등의 국경지역에서 영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인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도와 중국 간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실제로 군사 충돌이 발생하여 인도에 인명 피해까지 안겼다. 이 사건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도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쿼드(QUAD)’로 불리는 4개국(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안보대화를 활성화하고, 이들 국가들 간의 공동 군사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인도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였고 인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인도는 기존에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던 것에서 벗어나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 및 기술을 도입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미국과의 군사적 접근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적 충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스리랑카 등에 추진하면서 인도의 영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고 한다. 인도는 미국과 공동군사훈련 등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인도양 및 남중국해의 해상수송로 확보 및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면서 중국의 해상 진출 및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인도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IT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도는 전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테크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인도는 미국 IT 기업의 중요한 아웃소싱 대상국이자 미국 테크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디지털 경제’ 성장에 주목하면서 미국 테크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려고 한다. 인도는 AI, 5G, 양자컴퓨터,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미중과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인도의 전략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미중으로부터 ‘전략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선 분쟁과 같은 갈등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접근 방식은 향후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서 인도가 보다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인도는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비동맹주의 전통에 따라 비동맹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도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미중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인도는 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도의 역내 리더십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인도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도는 군사, 경제, 첨단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전략적 자립’은 향후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유럽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유럽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1. 유럽의 지역정세 현황 및 국제질서변화 인식

유럽 지역정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증가했다. 그 계기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다. 이 전쟁에 마주하여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대북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제재에 개의치 않은 채 군사기술 및 석유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9/} 2024년 6월에는 정상 회담을 통해 양자 간 군사동맹이 복원되었다. 남한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찬동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살상용 무기의 경우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여 사실상 우회 지원을 하는 형국이다.^{10/} 남북한이 공히, 수준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러-우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및 다방면

9/ “정제유로 밀착하는 북·러, 대북제재 노골적 무시?,” 『KBS』, 2024.5.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5755>> (검색일: 2024.9.10.).

10/ Michael R. Gordon, “South Korea to Sell Arms to U.S. for Ukrainian Forces Fighting Russia,”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10, 2022, <<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to-sell-arms-to-u-s-for-ukraine-11668116294>> (Accessed September 12, 2024).

의 교류·협력 확대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1/}

유럽의 정세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연관성 확대는 러-우 전쟁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과 따라, 유럽은 한편으로는 협력적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견제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별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EU는 2022년 3월 발표한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전략적 나침반’ 보고서(이후 전략적 나침반)를 통해 중국을 협력을 위한 동반자(partner for cooperation)이자,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체제적 라이벌(systemic rival)로 규정했다.^{12/}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확대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정세의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영향의 증대 그리고 두 지역 간 연관성의 확대라는 배경에서, 이 장(chapter)에서는 유럽의 국제질서 변화 인식과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유럽의 지역정세 현황과 국제질서변화 인식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유럽의 대외 정책 기조와 현안별 대응을 분석한다. 유럽은 지리적 영역으로서, 단일한 입장과 정책을 가진 정치적 실체가 아니다. 27개 회원국의 EU에는 영국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11/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협력 관련하여 다음 참조. 김상기, “North Korea’s Post-Pandemic Diplomacy: Characteristics, Intentions, and Outlook(국경봉쇄 해제 이후 북한의 외교: 특징과 의도, 전망),” 『Global NK』 (EAI 동아시아연구원, 2024.8.12.), <<https://www.globalnk.org/publication/view.php?cd=COM000154&ctype=1>> (검색일: 2024.9.13.).

1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For a European Union that protects its citizen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21, 2022, <https://www.eeas.europa.eu/eeas/strategic-compass-security-and-defence-1_en> (Accessed September 18, 2024).

참여하지 않으며, 32개 회원국의 NATO는 비유럽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를 포괄한다(〈표 III-1〉 참조).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모두 걸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장에서 유럽을 논할 때, EU의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보되, NATO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유럽은 러시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 III-1 EU와 NATO 회원국 현황

구분	유럽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창설 (1993.1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 6개국(네덜란드, 독일 [서독],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1952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 및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창설 (1949.4.)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12개국		12개국	
	현재 (2024.9.)	〈창설 이후 추가 가입국〉 - 1995: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 2004: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 2007: 루마니아, 불가리아 - 2013: 크로아티아 * 영국, 2020년 탈퇴	현재 (2024.9.)	〈창설 이후 추가 가입국〉 - 1952: 그리스, 튀르키예 - 1955: 서독(독일) - 1982: 스페인 - 1999: 체코, 폴란드, 헝가리 - 2004: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2009: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 2017: 몬테네그로 - 2020: 북마케도니아 - 2023: 핀란드 - 2024: 스웨덴
	총 27개국		총 32개국	

출처: EU <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 (검색일: 2024.9.8.); NATO <<https://www.nato.int/>> (검색일: 2024.9.8.).

가. 유럽의 지역정세 현황

최근 유럽의 지역정세를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2년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안보,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의 초기 상황은 예상과 다른 러시아의 고전이었다. 군사 강국이자 자원 부국인 러시아가 조기에 승기를 잡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 차단하고, 선전하는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4개주(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를 점령한 채 교착국면이 지속되었다. 2024년 10월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경 안쪽 영토인 쿠르스크(Kursk) 주의 일부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등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의 향후 전망을 속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최대 후원국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가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조기 종전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세계 정세를 흔들고 있는 러-우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 혹은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한편에서는 NATO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인식이 주된 이유라고 주장한다.^{13/} 1990년 냉전의 종식과 독일통일 승인 시기에

^{13/} John J. Mearsheim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kraine War," *Horiz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미국과 서방 지도자들은 소련에 NATO의 동진 배제를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00년대에 이미 NATO는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2021년 바이든 정부가 NATO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도모함에 따라, 러시아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은 것으로 인식하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14/ 푸틴 대통령은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NATO의 확장에 따른 안보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고, 2021년 말 우크라이나의 NATO 불가입과 동유럽에서의 NATO 자산 증강 금지를 미국에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15/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 야망 및 강대국 위상 회복 의도가 러-우 전쟁의 주된 원인이라 주장한다. 이는 주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주장으로서, 방어적 동맹인 NATO가 러시아를 위협할 이유가 없음에도 러시아가 무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권 확장에 나섰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패퇴시키는 것은 유럽의 안보는 물론이고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6/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 야망은 소련 해체 이후 혼돈의 시기를 겪으며 국제적 지위가 추락했던 러시아가 다시금 강대국 위상을 회복하고 다극질서의 주역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와 연관되며,

Summer, no. 21 (2022), pp. 12~27. 미국의 냉전 전략 혹은 대소련 봉쇄정책의 기초를 설계한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1998년 NATO의 확장이 미국 외교정책의 비극적 실책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수형,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김상기 외,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180.

14/ 김정섭, 『세계의 전쟁: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파주: 프시케의 숲, 2024), pp. 121~179; 이태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적 시각과 서방적 시각 비교 고찰』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pp. 8~25.

15/ 김정섭, 위의 책, pp. 153~154, pp. 163~164.

16/ 위의 책, pp. 121~179; Gideon Rachman, “Is There Such a Thing as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inancial Times*, April 20, 2023, <<https://www.ft.com/content/664d7fa5-d575-45da-8129-095647c8abe7>> (Accessed September 9, 2024).

또한 더 나아가서 과거 러시아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속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17/}

위의 상반된 두 견해 중 어느 하나만이 러-우 전쟁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 NATO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인식과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무력 침공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에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국제규범 무시 및 세력권 확장 의도를 비판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를 지지·지원하는 국가는 벨라루스뿐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18/}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는 독일이며, 다음은 영국이다(〈표 III-2〉 참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고 유럽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19/}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EU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3년 경제성장률이 미국, 독일, 영국 등 G7 국가들보다 높은 3.0%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약 2.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20/} 유럽의 위기 인식 및 대우크라이나 지원

17/ 이태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적 시각과 서방적 시각 비교 고찰』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pp. 8~25.

18/ 미국과 서방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벨라루스 외 북한과 시리아 등 소수의 국가가 러시아를 지지한다. 그 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 “마크롱, 우크라 파병론에 ‘또’ 불 지피…‘아무것도 배제 않는다,’” 『뉴시스』, 2024. 5. 3.,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503_0002722710&cID=&pID=00> (검색일: 2024.9.13.).

20/ “푸틴 구한 건 군대 아니었다... 러 경제, 獨제치고 유럽1위 왜 [우크라전 2년],” 『중앙일보』, 2024.2.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520>> (검색일: 2024.9.13.).

결의와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러-우 전쟁의 지속 동력이 되고 있으며, 만약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과 러시아 간 갈등과 대립은 러-우 전쟁 이후로 극히 심화되었고, EU-러시아 관계가 단기적으로 개선,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III-2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단위: US\$ billion)

국가	재정 지원	인도 지원	군사 지원	총액	GDP 대비 총액(%)	
유럽	그리스	0.00	0.00	0.14	0.14	0.07
	노르웨이	0.83	0.50	1.28	2.61	0.54
	네덜란드	0.77	0.61	4.74	6.12	0.60
	독일	1.51	3.28	11.01	15.80	0.37
	덴마크	0.13	0.31	6.86	7.30	1.83
	불가리아	0.00	0.00	0.25	0.25	0.30
	라트비아	0.05	0.02	0.47	0.54	1.35
	루마니아	0.00	0.13	0.00	0.14	0.05
	룩셈부르크	0.00	0.02	0.22	0.24	0.28
	리투아니아	0.04	0.11	0.80	0.95	1.43
	벨기에	0.21	0.09	1.86	2.16	0.36
	스위스	0.11	0.73	0.00	0.84	0.11
	스웨덴	0.37	0.28	4.21	4.86	0.76
	스페인	0.61	0.11	0.59	1.31	0.09
	슬로바키아	0.01	0.01	0.72	0.74	0.64
	슬로베니아	0.00	0.02	0.07	0.09	0.14
	아이슬란드	0.01	0.01	0.02	0.05	0.18
	아일랜드	0.04	0.10	0.00	0.15	0.03
	영국	3.59	0.90	9.60	14.10	0.45
	오스트리아	0.76	0.09	0.00	0.85	0.18
에스토니아	0.01	0.05	0.55	0.62	1.66	
이탈리아	0.44	0.50	1.44	2.38	0.11	
체코	0.00	0.06	1.33	1.39	0.49	

국가		재정 지원	인도 지원	군사 지원	총액	GDP 대비 총액(%)
	크로아티아	0.00	0.09	0.20	0.29	0.42
	튀르키예	0.00	0.01	0.07	0.07	0.01
	포르투갈	0.00	0.00	0.19	0.19	0.07
	폴란드	1.01	0.41	3.23	4.65	0.68
	프랑스	0.86	0.64	3.27	4.77	0.16
	핀란드	0.10	0.16	2.36	2.62	0.88
	헝가리	0.00	0.06	0.00	0.06	0.03
	EU	39.85	2.52	0.00	42.37	0.25
비유럽	뉴질랜드	0.00	0.03	0.02	0.05	0.02
	대만	0.00	0.03	0.00	0.03	0.00
	미국	22.50	2.81	55.49	80.80	0.35
	일본	8.63	1.09	0.07	9.80	0.20
	캐나다	5.12	0.43	2.17	7.72	0.39
	한국	0.41	0.31	0.02	0.73	0.04
	호주	0.00	0.11	0.63	0.74	0.05
총액		88.00	16.63	113.89	218.51	

출처: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https://www.ifw-kiel.de>> (검색일: 2024.9.8.), 러-우 전쟁 개전 이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집계된 금액이며, 공약(commitment)이 아닌 배정(allocation)액 기준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위해 더욱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NATO는 러시아의 기대와 다르게 더욱 확장되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새롭게 NATO 회원국이 되었다. 2020년 영국의 탈퇴로 인한 EU의 분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NATO의 상대적 약화가 러-우 전쟁을 계기로 극복되는 양상이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EU는 더욱 결집하고 NATO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럽의 안보와 경제는 또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 유럽은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안보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비 지출이

커지게 되었다.^{21/} 경제 측면에서 유럽은 대러제재로 인해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가스 및 석유, 석탄 등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22/} 특히, 가스관 연결을 비롯하여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독일의 부담은 상당하다. 물론, 유럽 에너지 수출 시장을 상실한 러시아의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유럽과 미국, 유럽과 중국의 관계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했고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EU의 핵심 의제를 부정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던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관계’는 동맹을 중시하면서 EU의 의제에 공감도가 높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회복·개선 국면으로 전환되었다.^{23/} 특히, 2022년 2월 러-우 전쟁 이후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여 NATO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유럽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은 더욱 커졌고,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중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행동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과 권위주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하는 NATO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4/} EU 스스로도 특히 중국 경제가

21/ 전혜원, “2023년 유럽의 전쟁과 평화,” 『IFANS FOCUS』, IF 2023-01K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2023.1.6.),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116&menuCl=&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검색일: 2024.9.12.).

22/ 러-우 전쟁 이전 EU는 가스 및 원유,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약 25%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김정섭, 『세계의 전쟁: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pp. 156~158.

23/ 윤성욱, “유럽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EU의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p. 99~136; 조홍식, “유럽연합의 대미 정책과 새로운 대서양 시대,” 『외교』, 제137호 (한국외교협회, 2021), pp. 253~264.

유럽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EU와 미국의 입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EU는 미국에 비해서 명시적으로 대중국 견제 입장을 표출하는데 신중하며, 대미 자율성도 중시한다.^{25/} 미중 경쟁과 미러 대립을 포괄하는 국제질서 변화 관련 유럽의 인식과 정책 대응은 다음에서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나. 유럽의 국제질서변화 인식

유럽의 당면 최대 현안이 러-우 전쟁이라면, 2010년대 이후부터 중장기적 미래까지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단극(unipolar), 양극(bipolar), 다극(multipolar) 등으로 불리는 강대국 간 힘의 분포 변화라 할 수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냉전의 양극질서가 종식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적 패권 질서가 지속되었다.^{26/} 그러나, 중국의 빠른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거치며, 국제질서는 이미 ‘탈단극(Post-Unipolar)’ 시대로 접어들었다. 단극질서의 지속 시기를 논자에 따라 약 20년 혹은 30년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질서의 종언은 분명하다.^{27/} 미중 간 힘의

24/ 김정섭, 『세계의 전쟁: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pp. 158~160; 전해원,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2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8.4.), pp.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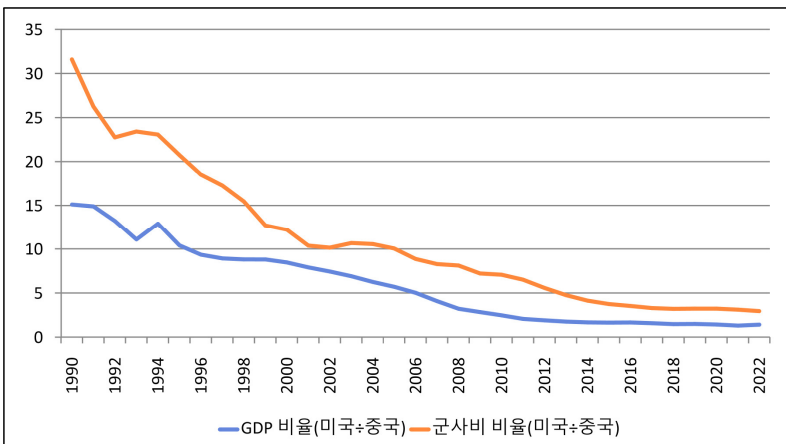
25/ 이효영,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4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12.22.), pp. 1~30,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261&clCode=P01&boardSe=>> (검색일: 2024.9.6.).

26/ 이혜정,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해,” 『한국과 국제정치』, 제16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pp. 1~38.

27/ Christopher Layne,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issue 1 (2012), pp. 203~213; Shaun Breslin, “Leadership and Followership in Post-Unipolar World: Towards Selective Global Leadership and a New Functionalism?,” *Chinese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 (2017), pp. 494~511; 차태서, “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국제·지역연구』, 제32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pp. 1~39.

격차 축소가 현재 국제질서의 탈단극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1992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중국의 약 13배였으나, 2012년 1.9배로 대폭 축소되었고, 3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4배까지 줄어들었다. 미국의 중국 대비 군사비 지출액도 1992년 약 23배에서 2012년 약 5.6배, 2022년에는 약 2.9배까지 축소되었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미국의 중국에 대한 GDP 및 군사비 비율



출처: GDP는 세계은행(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worldbank.org>> (검색일: 2024.9.8.)) 자료에 근거하며, 군사비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검색일: 2024.9.8.)) 자료를 활용함.

단극에서 탈단극 시대로 이동의 속성을 반영하는 뚜렷한 변화는 미중 간 전략경쟁의 전개와 심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면서 미국은 2011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했고,^{28/}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28/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ober 11, 2011, <<https://foreignpolicy.com/2011/10/11/americas-pacific-century/>> (Accessed September 9, 2024).

이름으로 더욱 강고한 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적극 활용하면서,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간 삼각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새롭게 설립하여 기존의 쿼드(QUAD) 및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 등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계승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보호무역 및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보조금과 관세의 활용은 물론이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29/} 중국도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등 국제질서에서 위상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광물 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30/}

러-우 전쟁과 미러 대립의 심화도 탈단극 질서의 반영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예고일 수 있다. 러-우 전쟁의 배경 중 하나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과 다극질서 형성 의도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구 소련연방 국가들의 규합을 도모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설립하는

29/ 이해정,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한국정치연구』, 제30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pp. 225~255; Fareed Zakaria, “Is Biden Normalizing Trump’s Foreign Policy?,”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16,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9/16/is-biden-normalizing-trumps-foreign-policy/>> (Accessed September 19, 2024).

30/ “美 정부에 ‘보복관세’, 기업에는 ‘당근책’... 中 투트랙 전략,” 『노컷뉴스』, 2024.4.29., <<https://m.nocutnews.co.kr/news/6136970>> (검색일: 2024.9.6.); “보복엔 보복...美 ‘철강에 고율관세’ 中 ‘수출제한 광물 추가,’” 『서울경제신문』, 2023.9.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LS4ORZ6>> (검색일: 2024.9.6.).

등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을 추구해왔다.^{31/} 따라서, 러-우 전쟁은 미국 주도 NATO의 확장과 이에 맞선 러시아의 지역전략, 즉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32/} 단극 이후 현재 국제질서의 성격에 대한 분석가들의 합의는 뚜렷하지 않다. 또한 앞으로 어떤 성격의 질서로 진화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미국과 더불어 양대 핵전력 강국이자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권인 러시아의 다극질서 지향성은 분명하며, 러-우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향후 국제질서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럽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 추구를 포괄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국제질서의 ‘극성(Polarity)’ 관련하여, EU는 세계가 이미 ‘다극’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지난 2022년 3월 EU가 발표한 ‘전략적 나침반’ 문서는 유럽이 경쟁적 “다극” 세계 안에서 권력정치가 귀환하는 상황(the return of power politics in a contested multipolar world)”에 직면했다고 적시한다.^{33/} 여기서 권력정치가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다극’ 세계는 EU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지향하는 국제질서가 투영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다극론은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의 귀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 및 중국과 더불어 3강을 형성하는 EU가 앞으로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국제질서의

31/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pp. 1~32.

32/ 위의 글, pp. 1~32.

3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For a European Union that protects its citizen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21, 2022.

핵심적인 한 축이 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기도 하다.^{34/} EU가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도 유사하게 다극적 국제질서를 선호하고 지향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35/} 그러나, 동일한 다극질서를 꿈꾼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EU는 분명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러시아가 다극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추구하는 제도·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호 간에 다를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력과 군사비 지출 측면에서 모두 이미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강을 형성한 중국에 대한 EU의 인식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EU가 2022년 3월 발표한 ‘전략적 나침반’에 잘 나타난다.^{36/} 중국은 협력을 위한 동반자이며, 동시에 경제적 경쟁자 및 체제적 라이벌이라는 것이다. EU의 이와 같은 대중국 인식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견제에 힘을 싣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력의 공간을 더 크게 고려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37/} 최근 EU는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완화, derisking)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탈동조화(decoupling)는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38/}

34/ 김시홍,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다극화, 전략적 자율 그리고 인도태평양,” 『EU연구』, 제5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pp. 219~243.

35/ 위의 글, pp. 219~243.

36/ 중국은 2022년 세계 경제의 약 18%(GDP 기준, 미국: 25%)를 차지했으며, 군사비 지출에서는 2023년 세계의 약 13%(미국: 37%)를 차지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For a European Union that protects its citizen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21, 2022.

37/ 이승근,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유럽연구』, 제41권 1호 (한국유럽학회, 2023), pp. 119~153.

38/ European Commission,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EU-China relations to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and the European Policy Centre,” March 30, 20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3_2063> (Accessed September 18, 2024).

협력과 경쟁의 양면을 함께 고려하는 EU에 비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NATO는 중국에 대해 ‘도전자’로서의 의미를 더욱 크게 부여한다. NATO는 2022년 6월, 12년 만에 발표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에서 “중국은 NATO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심과 강압적 정책을 천명한다”고 기술한다.^{39/}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도 NATO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면서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NATO는 이러한 견제의 입장과 더불어 NATO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다.^{40/}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NATO와 프랑스, 독일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EU 사이에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 NATO에 비해서 EU는 중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41/}

중국과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서양과 유럽의 여러 행위자들이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가진다. 유럽의 안보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러-우 전쟁 발발의 영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독일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뒤 ‘시대전환’을 선언하고 대러관계의 근본적 전환 의사를 밝혔으며,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러시아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42/} EU는 2022년 3월 발표한 ‘전략적 나침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침해했

39/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https://www.nato.int/strategic-concept/>> (Accessed September 18, 2024).

40/ 전혜원,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pp. 1~29.

41/ 이승근,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pp. 119~153.

42/ 김경숙·홍건식, “독일의 첫 국가안보전략서: 다극시대 회복력 강화,” 『이슈브리프』, 제44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6.28.), pp. 1~7,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Id=41036912> (검색일: 2024.9.5.).

으며 지구적 안보와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이고 2008년 조지아 공격,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 과거의 행위도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을 위한 행동이며, 사이버공격, 허위정보, 경제·에너지 강압, 공세적 핵 수사(nuclear rhetoric) 등과 더불어 모두 유럽의 안보질서 및 유럽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NATO 또한 2022년 6월 ‘전략개념’ 발표를 통해, “유럽과 대서양은 평화상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으며,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동맹의 안전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43/} EU, NATO,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공히 보여지는 이와 같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에 “지정학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44/}

2. 유럽의 대외정책 기초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럽 지역 27개 국가의 연합체로서 EU는 세계가 이미 경쟁적인 다극질서(a contested multipolar world)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그 다극질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대립의 심화를 비롯한 권력정치가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EU의 국제정세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을 반영하는 EU의 대외정책 기초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표현은 의미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대체로 EU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주적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외교·안보

^{43/}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44/} 김정섭, 『세계의 전쟁: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p. 156.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속에서 EU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45/}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고, 초기에는 주로 방위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1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안보와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2월 EU 외교이사회에서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강화 관련 논의가 있었다.^{46/} 2016년 이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는 더욱 확대되었고, 미국과의 차별성도 부각되었다.^{47/} 2016년 10월 발표된 ‘EU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은 미국을 비롯한 NATO 등 파트너들과의 여전한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이해가 다를 경우 행동할 역량의 확보 등을 의미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야망’을 강조한다.^{48/} 특히 2016년 5월 (EU의 첨단 군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영국의 EU 탈퇴 결정, 즉 브렉시트(Brexit)는 유럽의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 필요 인식을 증가시켰고,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과 유럽의 차별적 이해관계에 대한

45/ 김시홍,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다극화, 전략적 자율 그리고 인도태평양,” pp. 219~24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 (A Global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June 2016, <chrome-extension://efaidnbnmnbbpcjapglclefindmkaj/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eugs_review_web_0.pdf> (Accessed September 18, 2024).

46/ 윤성우, “유럽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EU의 전략,” pp. 99~136.

47/ 위의 글, pp. 99~136.

4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 (A Global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June 2016; Ulrike Franke and Tara Varma, “Independence Play: Europe’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8, 2019, <https://ecfr.eu/podcasts/episode/independence_play_europes_pursuit_of_strategic_autonomy/> (Accessed September 18, 2024).

인식을 더욱 고취시켰다고 볼 수 있다.^{49/} 이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2017년 9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주권(European Sovereignty) 개념 제시를 계기로, 방위·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50/}

‘전략적 자율성’의 기초 속에서 EU는 2022년 3월 자체적인 전략문서이자 EU의 ‘국방백서’로도 불리우는 ‘전략적 나침반(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se)’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 문서는 2016년 발표된 ‘EU 글로벌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약 2년간 준비를 거쳐 2022년 3월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2030년까지 유럽의 안보를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51/}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한 달 뒤에 발표됨에 따라 이 문서는 유럽의 안보 전략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EU 전략적 나침반은 우선 EU가 당면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다.^{52/} 첫째로 강조하는 도전은 강대국 권력정치의 귀환으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파트너이자 경쟁자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동유럽, 발칸, 남유럽 등 유럽의 각 지역과 아프리카, 중동, 인도-태평양,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유럽 이외 지역정세의 특징과 불안정 요인, 유럽에 대한 영향 등을 설명하며, 또한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과

49/ 이승근,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pp. 119~153; 김용민, “AUKUS 출범으로 변화하는 유럽안보 -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제40권 1호 (한국유럽학회, 2022), pp. 165~187.

50/ 윤성욱, “유럽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EU의 전략,” pp. 99~136.

51/ 이승근,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pp. 119~153.

5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For a European Union that protects its citizen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21, 2022.

비전통 안보 문제(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를 제기한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EU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다자주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NATO와의 협력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위협 인식과 대응 방향 속에서 EU 전략적 나침반이 제시하는 실행 방안의 골자는 △첫째, ‘행동(Act)’ :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능력의 확보(신속 배치 가능 병력 확보 등), △둘째, ‘안전(Secure)’ : 위협을 감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의 강화(정보 역량 강화, 사이버 방어 정책 개발 등), △셋째, ‘투자(Invest)’ : 기술 및 산업 의존 감소, 혁신 기술·역량 배양을 위해 더 많은 투자(미래 전투 항공 체계, 우주 기반 역량 등), △넷째, ‘파트너(Partner)’ : 공통의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증진(NATO 및 UN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양자 협력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53/}

EU가 전략적 나침반을 발표한 지 3개월 뒤인 2022년 6월 NATO는 10년 만에 갱신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표했다.^{54/}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은 2010년대 초반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서양 관계의 이완 혹은 경색이라는 배경 속에서 준비되고 발표된 것이었다.^{55/} 이 전략개념에서 NATO는 “유럽과 대서양 지역이 평화롭지 않다(The Euro-Atlantic area is not at a peace)”고 진단하고,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맹의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

53/ *Ibid.*

54/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55/ 전해원,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pp. 1~29.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다.^{56/} 또한 중국이 NATO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정책과 야심을 표출하면서,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전복을 피한다고 기술하며, 이와 더불어 권위주의 행위자들의 부상, 테러리즘,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분쟁과 불안정, 군비통제 및 비확산 체제의 침해, 기후변화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다.^{57/}

이러한 위협 혹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NATO는 유럽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억지·방어 능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강하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함께 표명했다.^{58/}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지지·지원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태평양의 상황이 NATO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59/} 이러한 입장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 및 미국의 중국 견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NATO의 위협 인식과 대응 기조는 EU와 유사성을 가지지만, EU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속에 자체적인 역량 확보·강화를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도 EU와 NATO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2022년 NATO의 전략개념에서 중국과의 건설적 관여에 열려있다는 표현을 찾을 수 있지만, 중국이 파트너 혹은 협력자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60/} 이러한 차이는 NATO를 주도하는 미국 그리고 영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대응이 EU를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과 어느 정도 상이하다는 데서 오

56/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57/ *Ibid.*

58/ *Ibid.*; 전해원,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pp. 1~29.

59/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60/ *Ibid.*; 전해원,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pp. 1~29.

는 결과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EU의 전략문서 개발에 관여하는 한편, 별도의 국가안보전략도 제시하는데 그 대략적인 위협인식과 대응 기조는 EU와 유사하다. 프랑스의 경우,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24~2030년 국방 예산을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액한다는 방침이며, 프랑스가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추동하고 EU와 NATO 간 협력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한다.^{61/} 또한 프랑스는 스스로 인도-태평양 국가임을 밝히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자국 영토 주둔 병력 증원을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balancing power) 역할을 추구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62/} 독일은 2023년 6월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서 독일은 21세기의 세계를 다극질서로 규정하면서, 러시아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중국은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체제적 경쟁자로 간주하며, 자체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EU 및 NATO와 협력을 강화할 것 이란 입장을 밝힌다.^{63/}

61/ 조은정, “프랑스·독일의 안보 전략서 개편 동향 및 전략적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23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11.17.),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7021&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 (검색일: 2024.9.6.); General Secretariat for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of French Republic, “National Strategic Review 2022,” November 9, 2022, <[chrome-extension://efaidnbmnnpbcepdjcejlmeio/https://www.sgdns.gouv.fr/files/files/rns-uk-20221202.pdf](chrome-extension://efaidnbmnnpbcepdjcejlmeio)> (Accessed September 18, 2024).

62/ 조은정, “인도태평양 시대 유럽의 국가전략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열린연구 토론회 발표자료, 2024.9.5.), pp. 1~33.

63/ 김경숙·홍건식, “독일의 첫 국가안보전략서: 다극시대 회복력 강화,” pp. 1~7; The Federal Government, “Robust, Resilient, Sustainable, Integrated Security for Germany: National Security Strategy,” June 2023, <<chrome-extension://efaidnbmnnpbcepdjcejlmeio/https://www.nationalesicherheitsstrategie.de/National-Security-Strategy-EN.pdf>> (Accessed September 17, 2024).

3. 유럽의 각 현안별 대응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전통적 안보 위협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안보에 이르기 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러-우 전쟁 관련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지 및 지원 입장은 EU와 NATO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모두 확고하다. 러시아를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이 타협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 즉 EU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자체 방위능력 확보, NATO 차원의 억지·방위 강화, 개별 국가 차원의 국방력 증대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U와 NATO는 핵확산 문제에도 유사한 대응 정책을 보여준다.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러시아의 핵위협 수사(rhetoric)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또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도 중요한 위협으로 거론한다. EU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라는 궁극적 목표를 견지하며, 당면하여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체제의 유지와 준수 그리고 군비통제(arms control) 및 군축(disarmament)에 관한 국제적 협력, 특히 미국 및 NATO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64/} NATO는 억지(deterrence) 능력 강화를 위한 핵무기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며 NPT 체제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벽

^{6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For a European Union that protects its citizen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21, 2022.

(bulwark)'임을 함께 강조한다.^{65/} 또한 군비통제와 군축이 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NATO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66/}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경우,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추구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 동맹국과 핵공유를 추진함과 더불어 신형 핵무기 개발 등 자체적인 핵억지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67/}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관련하여, 2021년 오커스(AUKUS) 출범을 둘러싼 대서양 관계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커스의 주된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견제이며, 미국이 영국과 협력하여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68/} 그러나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EU 및 소속 국가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호주는 프랑스와 맺었던 디젤 잠수함 건조 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프랑스 외교장관은 미국이 동맹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난했으며, EU도 프랑스를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을 비판했다.^{69/}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배경에 프랑스를 비롯한 EU 그리고 오커스 3국(미·영·호) 사이에 중국에

65/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66/ *Ibid.*

67/ 조은정, “프랑스·독일의 안보 전략서 개편 동향 및 전략적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23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11.17.),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7021&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 (검색일: 2024.9.6.).

68/ 최원기, “AUKUS 안보협력: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3.21.),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22&menuCl=&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검색일: 2024.9.5.).

69/ 권희진, “[권희진의 세계는] 프랑스의 분노.. “미국과 호주가 등에 칼을 꽂았다,” 『MBC』, 2021.9.17.,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01608_34880.html> (검색일: 2024.9.3.).

대한 인식의 격차, 즉 중국 견제를 최우선적 외교안보 과제로 인식하는 미국과 중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인식하는 프랑스를 비롯한 EU 사이의 차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70/} 또한 오커스 출범은 EU가 전략적 자율성의 강화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유럽 안보의 미국 및 NATO 군사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은 위와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자연재난, 테러리즘, 공중보건 등 비전통 안보 문제에도 유의하면서 대응책을 제시한다. EU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녹색기술 역량 강화, 민·군 공동안보방위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 확대, 기후변화 관련 안보문제에 대한 분석능력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71/} 또한 팬데믹 사태 및 기타 재난적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민 구호 및 대피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 차원 및 EU 차원 민·군 사이 효과적 조정 및 군사 지원을 위한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72/}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공동안보방위정책 수단을 사용하면서 법치의 범위에서 극단적 폭력 예방·대응 프로그램, 안정화 노력, 외교적 관여 및 정치적 대화 등을 추진, 지원한다는 것이다.^{73/} NATO도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데, 이를 테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사이버 공간 방위 능력을 개선하고,

70/ 한승완, “오커스(AUKUS) 출범에 대한 프랑스·EU의 대응과 전망,” 『이슈브리프』, 제30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0.28.),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159> (검색일: 2024.9.3.).

7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For a European Union that protects its citizens, values and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rch 21, 2022.

72/ *Ibid.*

73/ *Ibid.*

우주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도 강화할 것이며, 또한 테러리즘 억지·대응을 위해 UN 및 EU 등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74/}

경제 측면 현안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디리스크잉(derisking)’으로 대표될 수 있다. 경제의 안정과 보호의 의미를 가지는 경제안보는 유럽에서는 대략 2020년 이후 강조되어온 개념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급망의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 부상, 미중 무역 갈등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심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75/} 특히 디리스크잉은 2023년 3월 폰테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공식화한 방침으로서 EU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경제안보 전란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EU가 강조해온 전략적 자율성의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76/} EU의 디리스크잉 방침 선언 이후 미국 정부도 디리스크잉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는 디리스크잉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다.

전략적 자율성과 디리스크잉의 방향에서 2023년 6월 EU는 경제안보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그 문서는 EU가 당면한 위험(risks)의 형태로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의 복원력에 대한 위험 △중요 인프라(infrastructure)의 물리적·사이버 안보 관련 위험 △기술 유출 및 기술 안보 관련 위험 △경제적 의존 또는 경제적 강압의

74/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 June 29, 2022.

75/ 강유덕, “경제안보 패러다임에 따른 EU의 위험완화(de-risking) 전략: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의 연결성과 향후 도전과제,” 『유럽연구』, 제42권 1호 (유럽연구학회, 2024), pp. 81~116.

76/ 위의 글, pp. 81~116; European Commission,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EU-China relations to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and the European Policy Centre,” March 30, 20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3_2063> (Accessed September 18, 2024).

무기화 관련 위협 등을 적시한다.^{77/}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EU가 제시하는 대응책은 세 가지로서, △EU의 경쟁력과 성장 촉진 (Promoting): EU의 연구, 기술, 산업 기반 강화, 강력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원, 단일 시장 강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통한 경제 안전의 보호(Protecting): 경제적 의존 무기화에 대한 대처 등 △세계 도처의 국가들과 양자 혹은 다자적 협력 강화(Partnering) 등이다.^{78/} 또한 EU 경제안보전략은 구체적 수단으로 핵심원자재법(핵심 원자재의 대외의존도 완화 및 수입선 다변화 도모), 유럽반도체법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 도모), 기후중립산업법(친환경 산업기술 역량 강화 도모), 이중용도(dual-use) 제품 수출 통제(첨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79/}

77/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Council on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June 20, 2023,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3JC0020> (Accessed September 18, 2024).

78/ *Ibid.*

79/ *Ibid.*; 강유덕, “경제안보 패러다임에 따른 EU의 위험완화(de-risking) 전략: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의 연결성과 향후 도전과제,” pp. 81~116.

IV. 중동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중동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1. 중동의 지역정세 현황 및 국제질서변화 인식

가. 중동의 지역정세 현황

중동의 지역정세와 관련 최대의 관심 사항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방이다. 적어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차례 이어진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동 국가로는 카타르, 이집트가 협상 중재를 주도하고 있다. 카타르는 하마스와의 긴밀한 관계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3년 이집트가 제안한 평화안이 실패한 이후, 2024년 5월 미국이 새로운 3단계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은 군사적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 보복과 응징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마스는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2023년 11월 일주일간 성사된 휴전과 유사한

형태의 임시 휴전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0/}

휴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집트와 가자지구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필라델피 회랑(The Philadelphi Corridor) 통제권이다. 필라델피 회랑은 1979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2005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철군 이후 이집트로 이양되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필라델피 회랑이 하마스의 주요 무기 공급 경로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군대 주둔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등 이스라엘의 다른 정치인들은 첫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철수가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군하는 대신 요르단 계곡에서 활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무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집트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81/}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의 궤멸을 목표로 군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 극우 정치인들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에 반대하며, 공세적 팔레스타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극우 연정 사이에서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82/} 특히 이스라엘 시위대가

80/ "Gaza peace talks at 'dead end' as Israel rejects permanent ceasefire: report," *The New Arab*, June 23, 2024, <<https://www.newarab.com/news/gaza-peace-talks-dead-end-israel-rejects-permanent-truce>> (Accessed October 19, 2024).

81/ Jonah Naghi, "Securing the Philadelphi Corridor," *The Times of Israel*, September 17, 2024, <<https://blogs.timesofisrael.com/securing-the-philadelphi-corridor/>> (Accessed September 19, 2024).

82/ Dennis Ross and David Makovsky, "Why Israel Should Declare a Unilateral Cease-Fire in Gaza," *Foreign Affairs*, May 1,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middle-east/why-israel-should-declare-unilateral-cess-fire-gaza>> (Accessed August 31, 2024).

텔아비브 중심부에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2024년 9월, 약 75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었다.^{83/}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바이든 행정부와 극우 연정 사이에서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마스와의 협상을 통한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네타냐후 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극우 연정의 압력과 함께 전략적 관점에서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억지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네타냐후 정부는 2024년 9월 17일, 가자지구 전쟁의 목표에 기존의 하마스 군사 역량 제거, 인질 귀환,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해소라는 세 가지 과제에 더해,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주민의 귀환 문제를 추가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보다는 헤즈볼라를 포함한 전역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84/}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억지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전에는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국경지대에서 차단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으나,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의 가정까지 침투해 민간인을 살해하면서 위협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 30개국 이상의 국민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4명이 가자지구 내 인질로 잡히는 전례없는 피해가 발생

^{83/} Sakina Fatima, "Thousands of anti-govt protesters rally in Israel calling for hostage release deal," *The Siasat Daily*, September 15, 2024, <https://www.siasat.com/thousands-of-anti-govt-protesters-rally-in-israel-calling-for-hostage-release-deal-3096574/#google_vignette> (Accessed September 18, 2024).

^{84/} Jaroslav Lukiv, "Israel sets new war goal of returning residents to the north," *BBC News*, September 17,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g1kkrj94ldo>> (Accessed September 19, 2024).

하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85/}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국경 지역에서 무장 세력과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어졌고, 무장 세력의 제거를 목표로 강경한 군사 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남부와 북부 국경지대의 무장 단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휴전이나 종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헤즈볼라와의 국지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전쟁 목표에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주민 6만 명의 안전한 귀환을 전쟁 목표로 추가함과 동시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선호출기 수백 대가 폭발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약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86/} 이 사건으로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와 다수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따라서 가자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단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차원이 아닌,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연장선에서 인식한다. 2024년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후 양국 간의 보복전이 이어졌으며,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스파한을 타격했다. 전면전은 피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대중동원군(PMF)과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에 의한 ‘그림자 전쟁(Shadow War)’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85/} Anthony J. Blinken, “Anniversary of October 7th Attack,” *Press Statement*,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7, 2024, <<https://www.state.gov/anniversary-of-october-7th-attack/>> (Accessed October 9, 2024).

^{86/} Dan Sabbagh, “Hezbollah vows retaliation after exploding pagers kill at least nine and hurt almost 3,000,” *The Guardian*, September 17,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sep/17/hundreds-of-hezbollah-members-hurt-in-lebanon-after-pagers-explode>> (Accessed October 1, 2024).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대리자들을 이끄는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가자 전쟁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대리전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했으며, 이스라엘-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중동 정치의 최대 불안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24년 7월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아가 테헤란에서 피살되면서 긴장이 심화되었다. 나아가 9월 27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고,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갈등이 더욱 확산되었다.^{87/}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직후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 권리에 따라 실행되었으며, 이란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 밝혔다.^{88/}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한 중동에서의 군사적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가자 전쟁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마스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 수가 42,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89/} 종전 이후 가자지구의

87/ David Gritten, “Iran launches more than 180 ballistic missiles at Israel,” *BBC News*, October 2,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9dyxxgxv1jo>> (Accessed October 20, 2024).

88/ Masoud Pezeshkian, *X.com*, October 2, 2024, <<https://x.com/drpezeshkian/status/1841187077188141549>> (Accessed October 8, 2024).

89/ Ahmed Asmar, “Gaza death toll passes 42,000 as Israel kills 45 more Palestinians,” *AA.com*, October 9, 2024, <<https://www.aa.com.tr/en/middle-east/gaza-death-toll-passes-42-000-as-israel-kills-45-more-palestinians/3356291>> (Accessed October 26, 2024).

미래 관련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통치 권한을 가자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 지도부의 무능함과 국민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2024년에 임명된 무함마드 무스타파 총리도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이 방안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외부 국가들이 가자지구 통치를 담당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등 주요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 통치체제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90/}

나. 중동의 국제질서변화 인식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규칙기반 질서로 여겨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자유와 인권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며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경쟁했으며 냉전 이후 세계의 지배 질서로 대두하였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쇠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지정학적 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변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91/}

90/ 김강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배경과 주요 쟁점,” 『중동문제연구』, 제23권 2호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2024), pp. 16~17.

91/ 강선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60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pp. 301~330.

무엇보다 가자 전쟁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UN의 휴전 중재 실패는 국제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가운데 갈등 중재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미국의 중동 외교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92/}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 속에서 글로벌 미중 경쟁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대중동 정책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헨리 키신저는 중국이 오랜 갈등을 빚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 중재에 성공하자, 중동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93/} 이는 현재 중동의 국제질서가 미국 패권의 쇠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탈단극화 혹은 다극적인 질서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3개국을 순방하며, 중국 최초의 대아랍 국가 공식 외교 전략을 담아낸 ‘아랍 정책보고서(Arab Policy Paper)’를 발표했다.^{94/} 중국은 국가 주권을 존중하며 중동에서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려 한다.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려 해양 진출을 모색하

92/ Siu-kai Lau, “The US-dominated International Order is collapsing,” *China Daily*, March 17, 2024,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381450>> (Accessed August 10, 2024).

93/ Gilles Kepel, “Welcome to the Post-Kissinger Middle East,” *Tallberg Foundation*, June 7, 2023, <<https://tallbergfoundation.org/articles/welcome-to-the-post-kissinger-middle-east/>> (Accessed August 12, 2024).

94/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ll Text of China’s Arab Policy Paper,” January 13, 2016, <https://english.www.gov.cn/archive/publications/2016/01/13/content_281475271412746.htm> (Accessed August 12, 2024).

는 소위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강조하며 파키스탄, 스리랑카 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항구를 이용하여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대중동 정책 변화는 중동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며 신중하게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존의 ‘헤징(hedging)’ 전략에서, 최근에는 소위 ‘웨징(wedging)’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략은 미국과 중동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을 비판함으로써 아랍 세계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95/}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서구의 지배를 지속하려는 불공평한 체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 일로를 강조하고, 발전평화론을 주창하면서 대안적 국제질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아랍 국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리야드에 모여서 중국-아랍 연맹 정상회담과 중국-GCC 정상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중동에서 점증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중국은 팔레스타인 주요 두 정파인 하마스과 파타 간의 중재에 성공하여 ‘베이징 선언’을 이끌어냈다.

^{95/} Jonathan Fulton and Michael Schuman, “China’s Middle East policy shift from “hedging” to “wedging”,” *The Atlantic Council*, September 5,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chinas-middle-east-policy-shift-from-hedging-to-wedging/?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Accessed September 12, 2024).

이는 중국이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적 정책에 대한 대안적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물론, 파타와 하마스 간의 오랜 근본적인 불화와 가자 전쟁으로 인해 강화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가 있어 화해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동 문제에서 차별화된 중재자로서 외교적 역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중동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대체하고,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문제에도 관여하며, 미국 주도 질서를 위협하려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기반 질서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개혁해 더 포괄적이고 다극적인 체제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일례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22년 5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질서로 얻은 안정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화하기 보다 오히려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97/}

더욱이, 중국은 중동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와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안보 분야로도 관심을 확대하며, 중동 안보 분야에서 새 질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시진핑 주석

96/ China Research Unit, "Challenges Facing China's Mediation between Palestinian Factions," Emirates Policy Center, September 5, 2024, <<https://epc.ae/en/details/featured/challenges-facing-china-s-mediation-between-palestinian-factions>> (Accessed September 18, 2024).

97/ Antony J. Blinke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 Department of Stat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y 26, 2022, <<https://www.state.gov/the-administrations-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 (Accessed August 7, 2024).

은 제8차 중국-아랍 국가 협력 포럼 각료 회의에서 중동에서 안보 딜레마 해결을 위해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 구조 창출을 제안했다.^{98/} 2022년 왕이 외교부장은 제2차 중동 안보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아이디어를 재차 강조하며,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안보 구조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역외 국가들은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할 것, 그리고 지역 안보 대화의 강화를 촉구했다.^{99/}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질서변화 속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는 중동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고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문화적 친숙함 및 경제적 유대에 토대하여 중국보다 미국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9월 유럽외교위원회(ECFR)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 IV-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응답자의 50.2%가 미국을 선호한 반면, 38.6%가 중국을 더 선호하는 국가로 선택했다.

표 IV-1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중 선호도 여론조사
(2023년 9월 19일~9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12명의 응답자 대상 조사)

미국 진영(American Bloc)	중국(Chinese Bloc)	무응답/모름
50.2%	38.6%	11.2%

출처: Camille Lons, "East meets middle: China's blossoming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and the UAE,"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20, 2024, <<https://ecfr.eu/publication/east-meets-middle-chinas-blossoming-relationship-with-saudi-arabia-and-the-uae/>> (Accessed August 25, 2024).

^{98/}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ng Yi Attends the Second Middle East Security Forum," September 21, 2022, <https://www.mfa.gov.cn/mfa_eng/wjzbzd/202209/t20220923_10770221.html> (Accessed August 24, 2024).

^{99/} *Ibid.*

이와 관련, 2022년 아랍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 IV-2>와 같이 아랍 청년들의 78%가 중국을 동맹국으로 인식했으며, 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은 63%가 동맹으로, 37%가 적국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표 IV-2 아랍 청년들의 비아랍 국가에 대한 인식
(2022년 Arab Youth Survey)

국가	동맹으로 여기는 비율	적국으로 여기는 비율
중국	78%	22%
튀르키예	77%	23%
러시아	72%	28%
영국	70%	30%
프랑스	70%	30%
미국	63%	37%
이란	38%	62%
이스라엘	12%	88%

출처: Arab Youth Survey, "Charting A New Course," 14th Annual Edition, *arabyouthsurvey.com*, p. 40, 2022, (<https://arabyouthsurvey.com/wp-content/uploads/whitepaper/ays-2022-top-findings-presentation-en.pdf>) (Accessed August 24, 2024).

또한 아랍 청년층 서베이에 따르면, <표 IV-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73%가 미국이 중동에서 떠나는 것을 찬성하고, 27%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이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까지 미국은 탈중동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할 때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랍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중동 국가들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중국의 중동 진출이 가속화되는 변화하는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즉, 중동 국가들은 국제질서변화 속에서 다양한 외교적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질서변화에 대응하는 중동 국가들의 대외정책 기조를 분석할 필요성이 크며,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3 미국의 탈중동 정책에 대한 아랍 청년들의 인식
(2022년 Arab Youth Survey)

지역	찬성	반대
GCC국가	73%	27%
북아프리카 국가	71%	29%
레반트 국가	75%	25%
전체	73%	27%

출처: Arab Youth Survey, "Charting A New Course," 14th Annual Edition, *arabyouthsurvey.com*, p. 43, 2022, (<https://arabyouthsurvey.com/wp-content/uploads/whitepaper/ays-2022-top-findings-presentation-en.pdf>) (Accessed August 24, 2024).

2. 중동의 대외정책 기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사례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중동 핵심 동맹국으로 여겨져 왔다.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의 회동에서 양국은 석유 공급과 안보 지원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1951년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며 냉전 기간에도 동맹관계를 유지했고, 1990년 걸프 전쟁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전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중동에서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파트너십을 확립했다.^{100/}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요청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응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포함한 비OPEC 산유국들과 협력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01/}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 긴장을 초래하며, 중동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 맞물려 분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려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중동 안보에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기에 중국과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할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의 협력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헤징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철회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입이 발표되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익을 우선시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주의(opportunistic actionism)’ 외교 노선을 추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102/}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100/ 김강석, “중동의 다극화와 흔들리는 미국·사우디 80년 에너지 동맹,” 『한국일보』, 2022.11.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21014002189>> (검색일: 2024. 8. 27.).

101/ Kersten Knipp, “Oil, US or Russia: Whose side is Saudi Arabia really on?,” *DW.com*, October 12, 2022, <<https://www.dw.com/en/oil-us-russia-whose-side-saudi-arabia-really-on/a-63416006>> (Accessed August 30, 2024).

102/ 김강석, “브릭스의 중동 확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이슈브리핑』, 제218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4. 3. 21.), <http://snuiis.re.kr/sub5/5_4.php?mode=view&number=1738&page=1&b_name=isu> (검색일: 2024. 8. 15.); Clinzia Bianco, “Global Saudi: How Europeans can work with

가 안보 협력에 있어서 미국, 중국을 모두 포함한 글로벌 강국들과의 결속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균형(omni-alignment)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03/}

이러한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9년부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 되었으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로 간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104/} 특히 2023년 11월, 양국은 6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105/}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정책은 가자 전쟁 등 중동 내 갈등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역내 갈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이란과의 직접 대립을 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2024년 2월 유럽

an evolving kingdom,”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 3, May 2024, <<https://ecfr.eu/wp-content/uploads/2024/05/Global-Saudi-How-Europeans-can-work-with-an-evolving-kingdom.pdf>> (Accessed August 20, 2024).

103/ Michael Singh, “The Middle East in a Multipolar Era: Why America’s Allies Are Flirting With Russia and China,” *Foreign Affairs*, December 7,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middle-east/middle-east-multipolar-era>> (Accessed July 28, 2024).

104/ Clinzia Bianco, “Chinese Saudi: How Europeans can work with an evolving kingdom,”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 3, May 2024, <<https://ecfr.eu/wp-content/uploads/2024/05/Global-Saudi-How-Europeans-can-work-with-an-evolving-kingdom.pdf>> (Accessed August 20, 2024).

105/ Ghulam Ali, “Chinese yuan Gains currency in the Gulf states,” *East Asia Forum*, January 17, 2024, <<https://eastasiaforum.org/2024/01/17/chinese-yuan-gains-currency-in-the-gulf-states/>> (Accessed October 8,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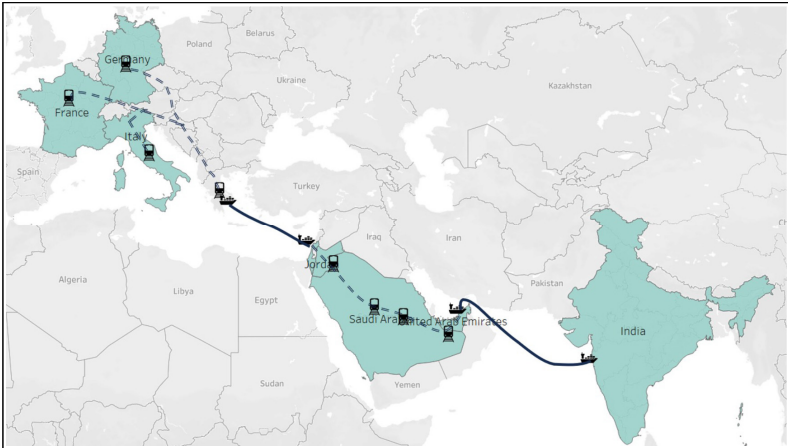
연합(European Union: EU)이 홍해에서 개시한 새로운 해양 안보 군사작전인 아스피데스(Aspides)에 참여할 경우, 후티의 보복과 이란과의 화해 분위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참여를 거부했다.^{106/}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검토해 왔으며, 가자 전쟁으로 인해 동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중재 하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연계한 협상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정상화의 실현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두 국가 해법에 어떠한 전략적 접근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07/}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동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환경이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06/ Leonardo Jacopo Maria Mazzucco, "Operation Aspides: The European Union's Response to the Red Sea Crisis," *Blog Post*,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April 3, 2024, <<https://agsiw.org/operation-aspidess-the-european-unions-response-to-the-red-sea-crisis/>> (Accessed October 3, 2024).

107/ Sam Dagher and Bloomberg, "Saudi-led alliance pushes Palestinian statehood plan as war rages between Israel and Hamas," *fortune.com*, March 1, 2024, <<https://fortune.com/2024/02/29/saudi-led-arab-alliance-palestinian-statehood-plan/>> (Accessed July 30, 2024); Khalid bin Badar Al Saud, "Normalization of Saudi Arabia-Israel relations depends on two-state solution," *The Guardian*, October 2,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oct/02/normalisation-of-saudi-arabia-israel-relations-depends-on-two-state-solution>> (Accessed October 9, 2024).

그림 IV-1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



출처: Yagyavalk Bhatt and Jitendra Roychoudhury,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Instant Insight*, KAPSARC(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 p. 3, October 2, 2023, <<https://www.kapsarc.org/research/publications/india-middle-east-europe-economic-corridor-bridging-economic-and-digital-aspirations/>> (Accessed October 9, 2024).

더욱이, 바이든 정부는 2023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구상을 발표했다. IMEC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결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로 인도와 중동을 연결하는 동부 회랑과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회랑으로 구성되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EU,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108/} 미국은 IMEC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108/} Yagyavalk Bhatt and Jitendra Roychoudhury,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 *Instant Insight*, KAPSARC(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 October 2, 2023, <<https://www.kapsarc.org/research/publications/india-middle-east-europe-economic-corridor-bridging-economic-and-digital-aspirations/>> (Accessed October 9, 2024).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무역 경로가 시험 운영되었다.^{109/} 가자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관계 정상화와 IMEC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이란

역내 국가 중에서 미국 주도 질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란이 있다. 2022년 11월 2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세계질서가 미국의 고립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10/}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저항의 축’을 억제하고, 중동에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주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헬기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024년 7월 12일자 테헤란 타임즈 기고문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어려운 시기 동안 일관되게 함께해 왔으며, 2021년 체결된 중국-이란 25년 장기 협력 합의를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109/} Clinzia Bianco, “Global Saudi: How Europeans can work with an evolving kingdom,” p. 11; Alberto Rizzi, “The infinite connection: How to make the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happen,”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pril 23, 2024, <<https://ecfr.eu/publication/the-infinite-connection-how-to-make-the-india-middle-east-europe-economic-corridor-happen/#the-road-ahead>> (Accessed September 6, 2024).

^{110/} Ali Khamenei, “Current World Order Will Be Replaced by a New Order where US Is Isolated, Asia Powerful, Resistance Front Expanded,” *Khamenei.ir*, November 2, 2022, <<https://english.khamenei.ir/news/9273/Current-world-order-will-be-replaced-by-a-new-order-where-US>> (Accessed August 22, 2024).

또한, 2023년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관계 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란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111/}

더욱이, 페제시키안은 국익을 우선하는 기회주의 정책(opportunity-driven policy)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협력과 번영을 외교정책의 중심 원칙으로 삼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페제시키안은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 Economic Union)와의 협력 강화를 표방하고,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파기와 까셈 솔레이마니 암살을 비판하며 이를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했다.^{112/}

이러한 맥락에서 이란의 대외정책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국의 패권 질서를 견제하는 새로운 안보 구조를 구축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서구 의존도를 줄이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 이란은 중동에서 다극화된 질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질서를 지지하고, 걸프만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에 대항하는 안보 구조 창출을 모색하며, 2019년 ‘호르무즈 평화 구상(Hormuz Peace Endeavor: HOPE)’을 발표했다.^{113/}

결과적으로 이란은 미국 중심 질서를 거부하고, 지역 강국의 부상을

111/ Masoud Pezeshkian, "My message to the new world," *Tehran Times*, July 12, 2024, <<https://www.tehrantimes.com/news/501077/My-message-to-the-new-world>> (Accessed August 15, 2024).

112/ *Ibid.*

113/ Sara Bazooband, "Iran's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Middle East Policy*, vol. 31, issue 1, February 14, 2024,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mepo.12727?af=R>> (Accessed July 20, 2024).

포함한 새로운 다극 질서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메네이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를 주장하며,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미국·이스라엘·유럽이 쇠퇴하며,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고 저항의 축이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알리 하메네이는 이러한 변화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114/}

더욱이, 이란은 선린 이웃 정책과 지역 통합을 강조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 국가들과의 화해를 모색한다.^{115/} 이는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중동 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간의 관계 개선은 다극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116/} 특히,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안보 우려를 낮추고, 지역 경제 통합으로 다양한 실익을 얻고자 한다.^{117/}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란의 또 다른 전략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적 군사 갈등을 가능한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114/ Ali Khamenei,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rrogant Powers in Decline and New Powers Emerging," *Khamenei.ir*, September 11, 2023, <<https://english.khamenei.ir/news/10083/Transformation-of-the-world-Arrogant-Powers-in-decline-new>> (Accessed August 30, 2024).

115/ Azadeh Zamirirad, "Iran on the Rise? Changing Perceptions and Global Ambitions under Raisi,"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April 19, 2024, <https://mecouncil.org/publication_chapters/iran-on-the-rise-changing-perceptions-and-global-ambitions-under-raisi/> (Accessed August 25, 2024).

116/ Sara Bazooband, "Iran's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Middle East Policy*, vol. 31, issue 1, February 14, 2024,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mepo.12727?af=R>> (Accessed July 20, 2024).

117/ Azadeh Zamirirad, "Iran on the Rise? Changing Perceptions and Global Ambitions under Raisi,"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April 19, 2024, <https://mecouncil.org/publication_chapters/iran-on-the-rise-changing-perceptions-and-global-ambitions-under-raisi/> (Accessed August 25, 2024).

과의 군사적 충돌은 이란의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 즉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이란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이란이 안보 문제에 깊이 연루되면,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방해받을 수 있다.^{118/}

마지막으로 이란의 대외정책은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거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란은 ‘룩 이스트’ 정책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방 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경제발전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한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보다 유연한 국제 전략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119/}

3. 중동의 각 현안별 대응

가. 가자 전쟁에 대한 대응

가자 전쟁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대응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아랍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는 가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 방식도 상이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에 집중하며, 지역 갈등이 목표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118/} *Ibid.*

^{119/} Javad Heiran-Nia, “How Iran’s Next President Sees an Emerging New World Order,” *Stimson Commentary*, July 17, 2024, <<https://www.stimson.org/2024/how-irans-next-president-sees-an-emerging-new-world-order/>> (Accessed August 18, 2024).

꺼리는 신중한 ‘전략적 실용주의(strategic pragmatism)’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20/} 반면, 이집트와 카타르는 휴전 협상을 적극 중재하며 가자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걸프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는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경제적 성과와 왕권 안정으로 전쟁에 개입할 동기가 크지 않다. 따라서 전쟁이 진정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121/} 한편, 이란은 가자 전쟁 이후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는 종파적 이유가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한 이후 이란이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온 것은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란은 가자 전쟁을 활용해 중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힘을 투사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탈미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하메네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가자 전쟁을 이란에게 유리한 정치 질서를 만들 기회로 인식하며,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중동의 새로운 질서 형

120/ Kabir Taneja, “What’s Behind Saudi Arabia’s Silence On Gaza? An Image Makeover,”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May 13, 2024, <<https://www.orfonline.org/research/what-s-behind-saudi-arabia-s-silence-on-gaza-an-image-makeover>> (Accessed July 30, 2024); Ali Bakir and Aziz Alghashian, “Why the Saudi-Iranian Pact Is Withstanding the Gaza War,”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Blog Post*, February 22, 2024, <<https://agsiw.org/why-the-saudi-iranian-pact-is-withstanding-the-gaza-war/>> (Accessed July 30, 2024).

121/ 안소연, “MENA 지역 정치 변동의 핵심에 위치한 걸프,” 『MENA Focus』, 12월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3.12.), <<http://wac.snu.ac.kr/?p=1679>> (검색일: 2024.8.15.).

성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122/} 이러한 맥락에서 이란은 가자 전쟁 이후 중동의 정치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미중 경쟁 속 AI 개발에 대한 대응

최근 걸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AI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AI 국가전략 2031’을 발표하며, 2031년까지 글로벌 AI 중심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123/} 이 계획의 핵심인 G42는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보좌관 셰이크 타흐누 빈 자이드(Sheikh Tahnoun bin Zayed)가 회장을 맡아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24/} 특히 AI 기술은 중동의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군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125/}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타와준 위원회, 네이벌 그룹, 마라케브 테크놀로지스는 국가 전투 관리 시스템(National Combat Management

^{122/} Seth J. Frantzman, “Khamenei promises ‘de-Americanization’ of Mideast,” *The Jerusalem Post*, November 29, 2023,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775727>> (Accessed August 28, 2024).

^{123/} Andrea Benito, “The UAE emerges as a global leader in AI, driving innovation and future technology,” *CIO.com*, July 9, 2024, <<https://www.cio.com/article/2514745/the-uae-emerges-as-a-global-leader-in-ai-driving-innovation-and-future-technology.html>> (Accessed October 29, 2024).

^{124/} Andrew Clemmensen, Rebecca Redlich, and Grant Rumley, “G42 and the China-UAE-U.S. Triangle,” *Policy Analysis*,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April 3, 2024,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g42-and-china-uae-us-triangle>> (Accessed September 5, 2024).

^{125/} U.S.-UAE Business Council, “The U.A.E.’s Big Bet on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Report*, p. 8, February 2024, <https://usuaebusiness.org/wp-content/uploads/2024/02/SectorUpdate_AIReport_Web.pdf> (Accessed September 5, 2024).

System: NCMS) 개발을 위한 공동 협정을 체결했다.^{126/}

한편, 미중 경쟁이 AI 분야로 확산되면서 걸프 지역의 AI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화웨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 왔다. 일례로 2023년 9월 화웨이는 리야드에 AI 협력을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지역’을 설립했으며, 중국 연구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압둘라 과학기술대학(KAUST)과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AI 대학(MBZAI)에서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127/}

중국과 걸프 국가 간 AI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견제와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걸프 국가를 통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 기업들의 중국과의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표적으로 G42는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Nvidia의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중국뿐 아니라 중동 일부 국가로 확대했는데, 이는 군사적 용도로의 사용을 우려한 조치로 평가된다.^{128/} 이러한 미국의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걸프 국가들의 칩 공급망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AI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129/}

126/ Emirates News Agency WAM, “Tawazun Council seals strategic partnership for development of National Combat Management System for UAE Navy,” March 8, 2024, <<https://www.wam.ae/en/article/b21h89g-tawazun-council-seals-strategic-partnership-for>> (Accessed September 5, 2024).

127/ Camille Lons, “East meets middle: China’s blossoming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and the UAE,”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20, 2024, <<https://ecfr.eu/publication/east-meets-middle-chinas-blossoming-relationship-with-saudi-arabia-and-the-uae/>> (Accessed August 25, 2024).

128/ Joe Middleton, “US restricts exports of Nvidia AI chips to Middle East,” *The Guardian*, August 31, 2023,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aug/31/us-restricts-exports-of-nvidia-ai-chips-to-middle-east>> (Accessed October 1, 2024).

129/ June Park, “AI Competition amid Expansion of U.S. AI Chip Export Controls into the Gulf,” *Issue Brief*,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June

2023년 6월, 미국 정부는 셰이크 타흐누 빈 자이드와의 회의에서 G42와 중국 간 거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G42는 2024년 2월 중국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했다. G42는 과거 미국 국방부에 의해 중국 군사 기관으로 지정된 BGI 게노믹스(BGI Genomics)와 협력한 바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통신사 에티살라트(Etisalat)가 화웨이와 거래함으로써 미국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130/} 현재 G42는 Nvidia, Cerebras, AMD 등 미국 기업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 정부의 중국과 G42 간의 거래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131/}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G42는 아부다비에 두 개의 AI 센터를 설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G42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132/}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 경쟁 속에서 걸프 국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OpenAI)와 같은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향후 중동에서 AI 기술 협력의 향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133/}

2024, <<https://mecouncil.org/publication/ai-competition-amid-expansion-of-u-s-ai-chip-export-controls-into-the-gulf/>> (Accessed October 1, 2024).

130/ Andrew Clemmensen, Rebecca Redlich, and Grant Rumley, "G42 and the China-UAE-U.S. Triangle," *Policy Analysis*,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April 3, 2024,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g42-and-china-uae-us-triangle>> (Accessed September 5, 2024).

131/ U.S.-UAE Business Council, "The U.A.E.'s Big Bet on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Report*, p. 8, February 2024, <https://usuaebusiness.org/wp-content/uploads/2024/02/SectorUpdate_AIReport_Web.pdf> (Accessed September 5, 2024).

132/ "Microsoft, UAE's AI firm G42 to set up two new centres in Abu Dhabi," *Reuters*, September 17, 2024, <<https://www.reuters.com/technology/microsoft-uaes-ai-firm-g42-set-up-two-new-centres-abu-dhabi-2024-09-17/>> (Accessed September 19, 2024).

133/ Camille Lons, "East meets middle: China's blossoming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and the UAE,"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20, 2024, <<https://ecfr.eu/publication/east-meets-middle-chinas-blossoming-relationship-with-saudi-arabia-and-the-uae/>> (Accessed August 25, 2024).

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대응

중동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국가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audi Green Initiative)’를 발표하며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34/}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에너지 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신도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135/}

그런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분야에서도 미중 경쟁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GCC국가들의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술 제공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Nvidia 같은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136/}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도 걸프 국가들과 신재생에너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134/ 안소연, “중동 산유국들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GS칼텍스 뉴스레터』 (GS칼텍스 미디어허브, 2022.11.16.), <https://gsclatexmediahub.com/energy/energy-column/middle_east_oil_producing_country/> (검색일: 2024.8.10.).

135/ 위의 글.

136/ Kudakwashe Muzoriwa, “G42 partners with NVIDIA on next-gen climate solutions,” *Gulfbusiness.com*, September 21, 2024, <<https://gulfbusiness.com/uaes-ai-firm-g42-nvidia-partner-on-climate-tech/>> (Accessed October 15, 2024).

태양광 공원과 누르 아부다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의 실크로드 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재생에너지 기업 ACWA Power의 지분 49%를 인수했으며, 2023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5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137/} 이러한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화하며 미래비전 실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중 경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라. 핵에너지 개발 및 핵확산에 대한 대응

오늘날 중동 국가들은 핵에너지를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며, 원전 개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중동에서 핵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핵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는 2011년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란과의 협력을 본격화했고, 2014년에는 부셰르에 원자로 추가 건설을 합의했다.^{138/} 이러한 협력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이란의 핵 능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139/} 또한, 2015년 러시아와 이집트는 엘 다비아에 1200MW급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협정했으며, 2022년 공사가

137/ Camille Lons, "East meets middle: China's blossoming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and the UAE,"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20, 2024, <<https://ecfr.eu/publication/east-meets-middle-chinas-blossoming-relationship-with-saudi-arabia-and-the-uae/>> (Accessed August 25, 2024).

138/ Aljazeera, "Russia to build Iran nuclear reactors," November 12, 2014, <<https://www.aljazeera.com/news/2014/11/12/russia-to-build-iran-nuclear-reactors>> (Accessed October 15, 2024).

139/ 김강석·안소연 "에너지 안보환경 변화와 EU, 러시아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42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2023), p. 20.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8년 원자로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140/}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기반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해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며, 이 기술이 민간 원자로 연료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이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41/}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러한 행보에 나섬으로써 중동 지역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밑 거래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142/} 특히, 가자 전쟁이 종전된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미국이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핵에너지 개발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0/ 위의 글, p. 21.

141/ Laura Kelly, "Senate Democrat raises concerns about US-Saudi nuclear deal," *The Hill*, May 1, 2024, <<https://thehill.com/homenews/senate/4637182-senate-democrat-raises-concerns-about-u-s-saudi-nuclear-deal/>> (Accessed September 30, 2024).

142/ Cathrin Schaer, "Nuclear deal likely to prompt a Middle East arms race?," *Qantara.de*, April 6, 2024, <<https://qantara.de/en/article/usa-and-saudi-arabia-nuclear-deal-likely-prompt-middle-east-arms-race>> (Accessed September 5, 2024).

V. 인도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도의 국제질서변화 인식과 대응

1. 인도의 지역정세 현황 및 국제질서변화 인식

가. 인도의 지역정세 현황

국제정치에 귀환한 지정학은 인도의 지역정세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해양세력과 대양세력,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등 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작금의 국제정세를 인식하면서 이를 자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인도는 냉전 시기부터 비동맹 운동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며 독립적 외교 노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는 인도의 대외전략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경제적 부상과 그에 따른 팽창주의 정책이 인도에 큰 안보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전략과 인도를 포위하는 ‘진주 목걸이(珍珠項鍊, String of Pearls) 전략’은 인도에게 직접적인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전략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인도는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진출은 2013년 시진핑 체제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고,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점차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인도양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4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인도는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의 80%를 충당하고 있다.^{143/} 또한 인도양은 세계 3대 해협인 말라카(Malacca), 호르무즈(Hormuz),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 해협과 같은 중요한 병목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44/} 따라서 중국의 해양으로의 팽창은 인도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에 2014년 출범한 인도의 모디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대부분 내륙의 미확정된 국경에서 연유하였다. 1962년에 국경분쟁에서 촉발된 전쟁을 치른 이후 양국은 3,488km에 달하는 국경을 두고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을 겪어왔다. 특히 2020년 라다크(Ladakh) 지역의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은 인도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일깨워 주었다. 이후 양국은 라다크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에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145/} 중국은 아루나찰

14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mpetition in the Indian Ocean," May 19, 2016, <<https://www.cfr.org/backgrounder/competition-indian-ocean#:~:text=What%20is%20the%20importance%20of%20the%20Indian%20Ocean?&text=The%20Indian%20Ocean%20covers%20at,both%20exports%20and%20domestic%20consumption>> (Accessed September 20, 2024).

144/ Rockford Weitz, "Strategic Maritime Chokepoints: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Shipping and Port Sectors," in *Eurasia's Maritime Rise and Global Security*, Palgrave Studies in Maritime Politics and Security, eds. Geoffrey F. Gresh (Palgrave Macmillan, Cham, 2018), pp. 17~29,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3-319-71806-4_2> (Accessed September 20, 2024).

145/ Sudha Ramachandran, "3 Years After the India-China Face-Off at Galwan Valley," *The Diplomat*, June 14, 2023, <<https://thediplomat.com/2023/06/3-years-after-the-india-china-face-off-at-galwan-valley>> (Accessed June 30, 2024).

프라데시 지역에 군사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인도도 터널, 도로, 다리 등 국경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국경 충돌에 대응하여 자체 개발한 Zorawar 전차를 배치하고,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146/} 라다크에서의 대치와 더불어, 2022년 12월에도 인도 북동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중국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치는 인도의 안보 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는 원인이자 인도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고 내륙에서도 동시에 팽창정책을 펼치면서 인도의 외교정책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47/}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역으로 인도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세계 외교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계기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벵골만,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안보회랑을 건설하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을 실행에 옮기면서, 인도와 미국도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인도가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체감하고 반중 연대로 인식되는 쿼드(QUAD)에 합류한 계기가 된 것은 2020년 이후 갈완 계곡 등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보협의체 참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부터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안보 태세를 보강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146/} Rajat Pandit, "India begins preliminary trials of its new light tank Zorawar," *Times of India*, September 13, 20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begins-preliminary-tanks-trials-of-its-new-light-tank/articleshow/113328952.cms>> (Accessed September 20, 2024).

^{147/} 최윤정,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인도 협력," 『외교』, 제145호 (한국외교협회, 2023. 4.), pp. 79~91.

열린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결성된 쿼드는 이제 인도의 안보 포트폴리오에서도 중국의 해양 패권에 대응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인도는 쿼드 국가들과 해상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활동을 감시 및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말라바르(Malabar) 연합 해군 훈련을 통해 해상 작전 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쿼드 외에도 인도는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서방의 관여를 촉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148/}

중국과 함께 인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분리된 이웃 국가 파키스탄과의 관계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Kashmir)를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겪었으며, 현재도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상호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침체, 그리고 테러리즘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149/} 더욱이 파키스탄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남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여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인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인도는 ‘이웃 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을 통해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빈곤,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이나 빔스텍(BIMSTEC)과 같은 지역 협의체의 핵심국가로서 지역 내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148/ Bhubhindar Singh and Sarah Teo, *Minilateralism in the Indo-Pacific: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Lancang-Mekong Cooperation Mechanism, and ASEAN* (London: Routledge, Abingdon, Oxon, May 26, 2020).

149/ The Center for Preventive Action, “Conflict Between India and Pakist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pril 9, 2024, <<https://www.cfr.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conflict-between-india-and-pakistan>> (Accessed June 20, 2024).

팬데믹 이후에는 백신 지원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150/}

한편 인도 서쪽에 위치한 중동 역시 인도에게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지역이다. 중동에는 약 890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노동자의 송금액은 인도에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151/} 따라서 인도는 중동의 정치적 안정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특히 경제적 협력 강화에 관심이 크다.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통해 자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인도의 국제질서변화 인식

인도는 국제질서가 대변혁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인도는 세계가 1945년 이후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 위협과 함께 전대미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52/}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150/ William Tow, "Minilateral security's relevance to U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Challenges and prospects,"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2 (2018), pp. 232~244.

151/ The Financial Express, "How money flows between MENA and India?," August 7, 2024, <<https://www.financialexpress.com/money/how-money-flows-between-mena-and-india-heres-all-you-need-to-know-3576243>> (Accessed August 20, 2024).

152/ Christopher S. Chivvis and Beatrix Geaghan-Breiner, "India in the Emerging World Ord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vember 6, 2023,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3/11/india-in-the-emerging-world-order?lang=en>> (Accessed July 30, 2024); Stephen J. Harper, "India Takes Its Rightful Place in an Evolving Global Order,"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February 23, 2024,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india-takes-its-rightful-place-in-an-evolving-global-order>> (Accessed July 30, 2024).

국제질서의 재균형이 시작되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인도가 추구해온 진정한 다극화의 도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변화한 것을 들고 있다. 세계 상위 경제 대국의 순위가 변화하면서 경제 규모의 측면에서 G20이 G7을 앞질렀고, 인도 역시 지난 10년간 6단계 상승하여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렸다.^{153/} 이같은 상대적 힘의 변화는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인도의 예상이다.^{154/}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도가 지닌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도는 세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동과 서로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개발, 부채, 자원 및 형평성과 관련하여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 이기주의로 서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 러-우 전쟁, 중동 분쟁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국제 사회의 변화를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강대국 경쟁과 진영화가 격화되면서 공급망, 인공지능(AI), 양자, 우주와 같이 그간 세계화의 기치 아래 협력이 강조되던 다양한 분야가 경쟁의 영역으로 재분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5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tober 2023: Navigating Global Divergen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0, 20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10/10/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3>> (Accessed August 20, 2024).

154/ *Ibid.* 실제로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는 이미 세계 경제에서 40%를 차지하고, 2030년에 이르면 세계 4대 경제대국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의 포트폴리오에도 새로운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조 조정이 필요해졌다.

인도는 이런 맥락에서 먼저 중국과의 국경 대치에서 과거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방치했던 국경 인프라 건설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자 인도는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을 본격 도입하고 쿼드를 비롯한 중국 견제의 국제연대에 참여를 결정하였다.

그렇다고 이같은 인도의 결정이 상기 반중국 연대의 모든 결정에 참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도 정부는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롯한 서방의 압력에 대항하여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등 인도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세계화가 야기하는 불공정한 경쟁에 맞선다는 명목 아래 인도의 노동자, 중소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에는 인도의 제조업 부흥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에 추가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측면을 한층 강조한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자립인도)’를 통해 인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무관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155/} 이는 인도가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구와의 협력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독자적 선택을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도는 특히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155/} Invest India, “Atmanirbhar Bharat Abhiyaan – Self-Reliant India,” May 12, 2020, <<https://www.makeinindia.com/atmanirbhar-bharat-abhiyaan>> (Accessed August 10, 2024).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디 정부 들어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라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체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 이래, 인도는 기술 업그레이드, 인재 육성 및 혁신 촉진, 사업 환경 개선 등 디지털 시대를 성공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156/} 그 과정에서 틱톡과 같은 중국의 앱, 게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있는 디지털 메커니즘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157/}

인도는 위와 같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인도의 모델이 글로벌 사우스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가 그간 국제질서 속에서 가해진 불합리한 대우에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에 봉착하는 경우 얼마나 큰 취약성에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분쟁은 글로벌 사우스가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의 여파로 에너지 및 식량 안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무역이 위축되고 국가 채무와 물가가 함께 급증하자 글로벌 사우스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도생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실현 가능성이 멀어지고 선진국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156/ “PM Modi lauds successful completion of nine years of Digital India initiative,” *News on Air*, July 1, 2024, <<https://www.newsonair.gov.in/pm-modi-lauds-successful-completion-of-nine-years-of-digital-india-initiative>> (Accessed July 20, 2024).

157/ Divya Bhati, “Full list of Chinese apps banned in India so far: PUBG Mobile, Garena Free Fire, TikTok and hundreds more,” *India Today*, August 21, 2022, <<https://www.indiatoday.in/technology/news/story/bgmi-garena-free-fire-tiktok-and-more-banned-in-india-check-the-full-list-1990048-2022-08-19>> (Accessed August 20, 2024).

백신, 달탐사선 찬드라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와 같이 인도가 이룩한 성과와 국제적 위상은 글로벌 사우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주장이다.^{158/}

하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구질서와 신질서가 오랜 기간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기울어지는 구질서의 긴 그림자 속에서 인도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입장 정립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인도의 답은 ‘비서구(Non-West)’와 ‘반서구(Anti-West)’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도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도 서구와 공통의 입장을 찾는 것이다.^{159/}

이상에서 살펴본 인도의 국제질서변화에 대한 인식은 다음 장에서 논하게 될 인도의 대외정책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초강대국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약화와 역할 재정립이 공세적인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세계 힘의 지도에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다. 강대국 역할의 공백과 현상 변경 시도가 포착된바, 이는 인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에게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질서의 적극적인 행위자가 될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1947년 독립 이후 다극 질서를 꾸준하게

158/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After India’s success story of Covid vaccine, it is the Chandrayaan-3 mission which will not only reiterate India’s indigenous capabilities but will also firmly place India as a global player to reckon with,” July 13, 2023,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39213>> (Accessed August 20, 2024).

159/ Dipanjan Roy Chaudhury, “India is non-West but not anti-West: Jaishankar,” *The Economic Times*, January 4, 2024,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india-is-non-west-but-not-anti-west-jaishankar/articleshow/106531511.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Accessed July 20, 2024).

옹호해온 인도에게는 ‘인도의 시간’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는 앞으로 국제질서 변환기 인도의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세력권의 리더십을 구사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인도의 대외정책 기조

인도는 전과 달리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인도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강조이다.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도가 취하는 외교노선은 현재 시점에서 서방과의 연대라는 형태로 관찰되는 바, 그 이유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변화하는 구질서 속에서도 인도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도가 지향하는 국제질서는 인도가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다극질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맞닿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분명한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 하에 더욱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힘의 균형자인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미 협력

최근 가장 치열한 전략경쟁이 펼쳐지는 무대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태평양’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개념을

소개한 이후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여 대외전략의 중요한 지역 단위이자 전략으로 진화되어 왔다. 인도의 대외전략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의 기원은 1991년 인도가 대외정책을 전환하면서 추진하였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방정책은 무역을 확대하려는 인도의 새로운 산업정책에서 가장 우선하는 대상으로 동남아시아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증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모디 정부는 동방정책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의미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이는 인도양을 중심 무대로 활동하였던 인도가 태평양으로 피봇을 옮기는 분기점이 되었다. 따라서 신동방정책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의 형성과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비전은 신동방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의체인 아세안(ASEAN)은 인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도 이제는 인도의 직접적인 관심 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인도-태평양 개념이 인도 조야에서 논의되던 초기에는 반중동맹 형성에 대한 거부감과 미국 주도 기구에 가입할 경우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모디 총리가 2018년 싱가포르 상그릴라 대화에서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처음으로 발표할 때만 해도 미국, 일본이 주장하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 포용성(inclusiveness)을 더한 FOIIP를 원칙으로 세울 만

큼 중국을 섬세하게 고려하였다.^{160/} 하지만 2019년 인도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국(Indo-Pacific Division)을 설치하고 점차 이를 본격적으로 인도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흡수,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사실 아시아·태평양 개념에서는 인도가 변방이지만 인도-태평양에서는 인도가 핵심국가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인도양과 태평양의 협력국가들에게 핵심적인 파트너인 인도의 국익과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인도-태평양은 인도에게 유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국가전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꾸준히 강화되었다. 인도는 9.11 테러 이후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에 나섰다. 이후 양국 관계는 한 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2015년 모디 총리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인도 독립기념일에 주빈으로 초청하면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때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표하며 인도-미국 국방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161/}

이후 인도와 미국은 2016년 군수지원협정(LEMOA), 2018년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협정(COMCASA), 2020년 기본교류협력협정(BECA) 등 핵심적인 군사 협정을 차례로 체결하였다. 양국이 체결한 일련의 협정들은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중국의 군사력

160/ 최윤정, “신냉전 시대 인도의 외교적 선택과 전략적 자율성,” 『세종정책브리프』, 제17호 (세종연구소, 2022.9.20.),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3&seq=6753>> (검색일: 2024.8.20.).

161/ The White House, “U.S.-India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 January 25, 201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1/25/us-india-joint-strategic-vision-asia-pacific-and-indian-ocean-region>> (Accessed July 30, 2024).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택인 것이다.

포용성(inclusiveness)과 개방성(openness)을 기반으로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인도는 공통의 이슈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어느 한 국가를 봉쇄하는 동맹의 형성을 피하고, 점진적 변화를 지향하며, 지역 다자기구와 다양한 그룹 중심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162/} 여러 다자 협의체 중에서도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고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쿼드는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포용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적 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인도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미국과 인도가 국방 산업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체결하였고, 첨단기술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출범시켰다. 인도와 미국의 외교-국방(2+2) 대화는 2023년 11월에 5차 회담까지 이어지며, 양국 간의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63/}

^{162/} Walter Ladwig, "The Indo-Pacific in Indian Foreign Policy," *RUSI*, April 30, 2024,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policy-briefs/indo-pacific-indian-foreign-policy>> (Accessed July 30, 2024).

^{163/}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n the Fifth Annual India-U.S. 2+2 Ministerial Dialogue," November 10, 2023,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n-the-fifth-annual-india-u-s-22-ministerial-dialogue/>> (Accessed July 30, 2024).

나. 전략적 자율성

인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중 전략경쟁, 나아가 서방 대 비서방 대결 구도 속에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오랜 국경분쟁은 여러 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관계 진전도 미미하다.^{1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강대국 간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모디 정부 하에서 인도는 어느 국가와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165/} 이는 인도가 다극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더라도 단일 국가가 세계질서를 독점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강대국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전략이다.

냉전 종식 이후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균형을 실현해 왔다. 이는 인도가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극적 질서를 앞당기려는 장기적인 목표와 연관된 외교정책을 지속하고 있다.^{166/}

164/ Ivan Lidarev, "Can 2024 Bring a New Breakthrough in China-India Relations?," *The Diplomat*, January 4, 2024, <<https://thediplomat.com/2024/01/can-2024-bring-a-new-breakthrough-in-china-india-relations/>> (Accessed July 12, 2024).

165/ Subrahmanyam Jaishankar, *The India Way: Strategies for an Uncertain World* (India, Noida, Uttar Pradesh: Harper Collins, 2020).

166/ Derek Grossman, "Modi's Multipolar Moment Has Arrived," *Foreign Policy*, June 6,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6/06/modi-india-russia-ukraine-war-china-us-geopolitics-multipolar-quad>> (Accessed July 30, 2024).

이같은 인도의 전략적 균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소다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도는 쿼드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 호주와 협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와 경제 협력을 논의한 뒤에도, BRICS 정상회담에 참여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놓치지 않았다. 2023년 BRICS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위성 데이터를 BRICS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협정을 이끌어내며 우주 협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인도는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대립보다는 협력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외교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러시아-인도-중국(RIC) 등 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모든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및 안보 협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러-우 전쟁은 이같은 인도식 전략적 자율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에서 기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3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도의 유엔 안보리 참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의 기술력이 매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모디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인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연설하였다.^{16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인도의 접근 방식 역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인도는

167/ Anup Roy, "Putin Backs India's Bid for a Permanent Seat in U.N. Security Council, Despite China Opposition," *TIME*, October 6, 2023, <<https://time.com/6321278/russia-putin-india-unsc/>> (Accessed July 20, 2024).

2015년에 발표한 해양전략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으로 걸프만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과 서인도양 지역을 꼽은 바 있다.^{168/} 실제 중동은 인도에게 핵심 이해가 걸린 지역이다. 중동에는 약 900만 명의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고,^{169/}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2024년 9월 9일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회 인도-걸프협력이사회(GCC)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개최하였다.^{170/}

인도는 GCC의 관계가 풍부한 역사, 문화, 공유 가치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같은 유대감 위에 양자 관계는 경제, 에너지, 국방, 기술, 교육, 사람 간의 유대 관계를 아우르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에 대해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서 가능한 한 빠른 휴전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두 국가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팔레스타인의 정부 및 기구의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과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1/}

^{168/} Indian Navy,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New Delhi: The Directorate of Strategy, Concepts and Transformation, Integrated Headquarters, Ministry of Defence(Navy), 2015).

^{169/} "With 9m in Gulf countries, GCC makes top destination for Indian expats," *Arab News*, July 30, 2023, <<https://www.arabnews.com/node/2346486/world>> (Accessed September 20, 2024).

^{170/}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Opening remarks by EAM, Dr. S. Jaishankar at the first India-GCC Ministerial Meeting for Strategic Dialogue," September 9, 2024,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38278/Opening_remarks_by_EAM_Dr_S_Jaishankar_at_the_first_IndiaGCC_Ministerial_Meeting_for_Strategic_Dialogue> (Accessed September 20, 2024).

^{171/} Angad Singh Brar, "India's commitment to Gaza through the UNRWA," *Hindustan Times*, September 8, 2024, <<https://www.hindustantimes.com/ht-insight/international-affairs/indias-commitment-to-gaza-through-the-unrwa-101725728119084.html>> (Accessed September 12, 2024).

다. 글로벌 사우스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다극적 세계를 추구하는 인도 외교의 배경은 반서방에 해당하는 국가들 간의 연합체에 그치지 않는다. 인도는 최근 외교 영역에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공격적으로 펼치는 대표주자이다. 선진 7개국(G7)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70%에서 현재 40%까지 하락하여 경제적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172/}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급망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광물, 식량 등 자원의 무기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원부국으로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 브릭스(BRICS), 상하이 협력기구(SOC), G20, IPEF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외교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모두 인도가 핵심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인도는 유엔 개발도상국 77개국 모임인 G-77과 비동맹 운동에서도 핵심 멤버로 활약해왔다. 인도는 또한 2023년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 G20, SOC 회의를 주관하며 개도국·신흥국의 대변자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G20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9월 9~10일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아프리카연합(AU)을 G20의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23년 제1차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2023.1.12.)에 이어 11월에 제2차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2023.11.17.) 이스라엘-

172/ 최윤정,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세종정책브리프』, 제18호 (세종연구소, 2023.12.21.),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3&itm=&txt=&pg=1&seq=7499>> (검색일: 2024.8.20.).

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은 인도의 외교적 전통에서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인도의 외교적 노선은 비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모디 정부에서는 이를 다극동맹(multi-aligned)과 글로벌 사우스 외교로 발전시켰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냉전이 종식된 이후 비동맹외교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는데, 인도의 경우 2012년에 발표한 비동맹 2.0(Non-Alignment 2.0)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높아진 위상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연대와 협의체에 가담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가 세계 5위의 경제력(2022년 IMF)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의거하여 현재는 G-20이나 가까운 미래 G-7 확장 그룹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도는 근미래 강대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노스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173/}

라. 바라트(Bharat) 외교 전략

인도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라트(Bharat)이다. 바라트라는 명칭은 고대 인도 문헌에 등장하는 바라타 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라타 왕은 인도 아대륙을 통일하여 다양성 속의 단결이라는 이상을 구현한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된다.^{174/} 따라서 바라트를 강조하는 것은 인도의

173/ 최윤정, “글로벌 사우스의 도전과 대응: 인도의 인식과 전략,” 『이슈브리핑』, 제220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4, 3, 25.), <http://www.snuiis.re.kr/sub5/5_4.php?mode=view&number=1740&b_name=isu> (검색일: 2024, 8, 20.).

174/ Jawaharlal Nehru, *The Discovery of India* (Penguin Random House; 2nd edition, October 31, 2004).

오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힌두 민족주의와 결부된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 헌법 1조는 인도를 “인도, 즉 바라트”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내포하며, 인도의 오랜 역사와 정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175/}

특히 바라트는 모디 정부 하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인도의 자립과 자주적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중요한 구호로 자리 잡았다. 모디 정부는 2015년 “하나의 인도, 강력한 인도(Ek Bharat, Shreshta Bharat)” 캠페인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바라트 정신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176/} 이 캠페인은 인도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단결을 강조하며, 인도의 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자립을 상징한다.

모디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도 바라트 정신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적 자립을 상징하는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자립인도)’ 정책은 인도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인도산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인도 내에서 힌두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자립 정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도의 경제적 회복력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177/}

175/ “India, that is Bharat: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ancient name,”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6, 202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india-that-is-bharat-the-origin-and-meaning-of-the-ancient-name/articleshow/103401596.cms?from=mdr>> (Accessed September 12, 2024).

176/ Government of India, “Ek Bharat Shreshtha Bharat,” <<https://ekbharat.gov.in/>> (Accessed July 12, 2024).

177/ Subrahmanyam Jaishankar, *Why Bharat Matters* (New Delhi: Rupa Publications India, January 3, 2024).

바라트는 대외정책에서도 인도 특유의 외교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도라는 국가 체제를 넘어 세계 속에서 인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문명국가로서 인도는 더욱 중요한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이슈에서 인도가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인도 정부는 2023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을 성사시킨 것 등을 인도 바라트 외교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178/}

이러한 바라트 외교는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인도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외부의 영향에 순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국가 목표를 수립하고 실현하는 자주적 접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국, 미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인도가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바라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도의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바라트는 정치적, 문화적 상징으로서 인도의 대외정책보다는 내부 정치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78/ Harsh Vardhan Shringla et al., *The Grand Success of G20 Bharat Presidency*,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September 24, 2023, <https://www.ris.org.in/sites/default/files/Publication/G-20-Presidency-Book_24-09-2023.pdf> (Accessed July 12, 2024).

3. 인도의 각 현안별 대응

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전략

인도와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는 러-우 전쟁과 관련된 글로벌 긴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를 회피한 국방, 원자력, 무역 거래를 오히려 확대하는 한편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인도 외교정책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략한 것을 넘어 서방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편을 선언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 천연가스 및 원유 수입 금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를 위시한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각 국의 동참 여부는 진영 선택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179/}

그런데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 투표에서 기권하고 쿼드 정상회담 입장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포함되는 것을 막았다. 반대로 SWIFT 결제망을 우회하는 ‘루피화-루블화 무역협정(rupee-ruble trad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공백이 생긴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에서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180/}

러시아는 인도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로, 1971년 인도-파키스탄

179/ 최윤정, “[세계와 우리] 반러 전선에서 이탈한 인도의 선택법,” 『세계일보』, 2022.3.2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324514651>> (검색일: 2024.9.12.).

180/ 위의 글.

전쟁 당시 군사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카슈미르 분쟁 등 인도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인도를 지지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인도와 러시아 간에는 긴밀한 군사, 과학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도의 군사 장비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최대 70~85%(구소련 연방 포함 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81/} 러시아산 군사 장비는 저렴한 가격에 최신 기술 이전, 부품 교체,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도가 2018년 러시아에서 구입한 S-400 지대공 미사일(SAM)은 미국의 1/3 가격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대러 관계의 이점과 동시에 관계 악화 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인도와 각각 1차례, 4차례 전쟁을 치루고 영토 분쟁이 진행형인 중국과 파키스탄에 러시아가 첨단무기를 공급하는 후원국이 되는 것, 나아가 러시아가 중국의 궤도에 빠져드는 것을 막는 일은 인도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7월 8~9일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하여 5년 만에 모스크바에 방문한 것은 인-러 관계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Special and Privileged Strategic Partnership)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의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국방, 무역, 에너지 분야 등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러-우 전쟁과 관련하여 8일의 비공식적 환담에 이어 9일의 공식 정상회담에서도 모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181/} “India, world’s biggest buyer of Russian arms, looks to diversify suppliers,” *Reuters*, May 19, 2022,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worlds-biggest-buyer-russian-arms-looks-diversify-suppliers-2022-05-18>> (Accessed August 20, 2024).

못하고 폭탄, 미사일, 소총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182/}

모디 총리는 이어서 8월 23일에는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이는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래로 인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다. 모디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동에서는 러-우 전쟁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모디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는 중립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의 편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183/} 이는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단순히 실리외교를 넘어 인도의 외교적 지향에 부합하는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며, 인도의 목적이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로서 개발도상국의 리더가 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군 현대화 및 국방력 강화

인도의 군 현대화 및 국방력 강화는 최근 몇 년간 특히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비폭력적 방식의 안보태세를 강조해왔으나, 근래에는 중국과의 갈등과 인도양에서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인도의 군 현대화 노력은 특히 모디 정부 하에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인도의 군사력

^{182/} “Modi’s balancing act as he meets Putin in Moscow,” *BBC*, July 9,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pd91pe5r9go>> (Accessed August 20, 2024).

^{183/} Elizabeth Roche, “Modi Waves the Peace Flag in Ukraine,” *The Diplomat*, August 26, 2024, <<https://thediplomat.com/2024/08/modi-waves-the-peace-flag-in-ukraine>> (Accessed August 20, 2024).

증강은 크게 방산구매의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우주 국방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도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전통적으로 의존해왔던 러시아산 무기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3년 7월, 인도 정부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26대와 스코펜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인도의 항공모함 INS Vikrant에 사용될 전투기와 잠수함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와의 방산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84/} 인도는 2015년에도 40억 유로 규모의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였으며,^{185/} 최근 추가 구매를 통해 자국의 공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으로부터는 AH-64E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와 CH-47F 치누크 중량 헬리콥터를 도입하여 공중 전투 및 보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186/}

둘째, 인도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 캠페인을 통해 국내 방산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인도는 이를 위해 2020년 국방

184/ “India gives initial approval for purchase of French fighter jets and submarines,” *France 24*, July 13, 2023,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30713-india-gives-initial-approval-for-purchase-of-french-fighter-jets-and-submarines>> (Accessed August 20, 2024).

185/ “India orders 36 French-made Rafale fighter jets, PM Modi says,” *France 24*, October 4, 2015, <<https://www.france24.com/en/20150410-india-france-french-36-rafale-jets-modi>> (Accessed August 20, 2024).

186/ “Boeing delivers AH-64E Apache and CH-47F(I) Chinook to IAF,” *Airforce Technology*, July 13, 2020, <<https://www.airforce-technology.com/news/boeing-delivers-ah-64e-apache-and-ch-47fi-chinook-to-iaf/>> (Accessed August 20, 2024).

획득절차(DAP)를 도입하여 방산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방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했다.^{187/} 이와 더불어 인도는 전략적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방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프랑스의 다쏘(Dassault Aviation) 등과 협력하여 전투기 및 항공기 부품을 공동 생산하는 등, 국제 방산기업들과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인도는 우주 국방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인도는 국방우주국(Defense Space Agency: DSA)을 설립하여 우주 관련 군사 활동을 통합하고, 우주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인도는 위성 기반 감시, 통신 및 정찰을 통해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우주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미션 샵티(Mission Shakti)’를 통해 저궤도 위성을 격추하는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위성요격미사일(ASAT) 개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188/} 이로 인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우주 무기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잡았다.

인도의 우주 국방 강화 노력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군은 ISRO가 제공하는 위성 통신, 지리 공간 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활용해 우주 기반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GSAT-7A 위성은 인도 공군과 육군

^{187/}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Defence Acquisition Procedure 2020*, November 11, 2021,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ddpmod.gov.in/sites/default/files/DAP%202020%20%2011%20Nov%2021_0.pdf> (Accessed August 20, 2024).

^{188/} Government of India, Defence Research&Development organisation, Ministry of Defence, *Anti-Satellite Missile*, 2020, <https://drdo.gov.in/drdo/sites/default/files/inline-files/ASAT_book_English.pdf> (Accessed August 20, 2024).

의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89/} 이러한 우주 국방 강화는 인도가 앞으로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190/}

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안보화

인도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심화로 인한 위협에 더하여 서방 세계의 중국 거리두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산 앱 금지, 투자 심사 강화, 자국 중심의 기술 발전 촉진 및 무역협정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 확대와 그로 인한 안보 우려에 대응하여, 인도는 틱톡(TikTok)을 비롯한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250여 개의 사용을 금지했다.^{191/} 이 조치는 2020년 라다크에서 발생한 인도-중국 국경 충돌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인도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

189/ Government of India,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Department of Space," *GSAT-7A*, December 19, 2018, <https://www.isro.gov.in/GSAT_7A.html#:~:text=GSAT%2D7A%20is%20the%2035th,band%20over%20the%20Indian%20region> (Accessed August 20, 2024).

190/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India's Space Priorities Are Shifting Toward National Secur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eptember 1,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2022/09/01/india-s-space-priorities-are-shifting-toward-national-security-pub-87809>> (Accessed September 12, 2024).

191/ "Full list of Chinese apps banned in India so far: PUBG Mobile, Garena Free Fire, TikTok and hundreds more," *India Today*, August 21, 2022, <<https://www.indiatoday.in/technology/news/story/bgmi-garena-free-fire-tiktok-and-more-banned-in-india-check-the-full-list-1990048-2022-08-19>> (Accessed August 20, 2024).

정부는 중국산 앱이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인도 국민들의 개인 정보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이러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자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국 기업의 인도 내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인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투자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인도 경제와 인프라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려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전략적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이외의 경제 협력 파트너를 찾기 위한 인도의 탐색도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인도는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와 각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도는 영국, EU, 캐나다 등과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EPA)과 같은 다각적인 경제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인도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미국과의 협력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2023년 새로운 국방 대화를 통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전략적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과 인도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는 35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는 첨단기술 개발에 있어 두 국가 간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192/}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인도-미국 양자 조정 메커니즘(Joint Indo-US Quantum 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은 첨단 통신기술, 5G 인프라, 개방형 RAN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첨단기술과 과학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193/}

또한 인도는 미국과 함께 사이버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인도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함께 사이버 보안, 우주기술, AI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민관 합동 태스크 포스(Task Force: TF)를 발족하여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은 안보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도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 체결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192/} Karmendra Kohli, “Strengthening US-India digital ties: A new era of cybersecurity collaboration,” *Express Computer*, June 29, 2023, <<https://www.expresscomputer.in/columns/strengthening-us-india-digital-ties-a-new-era-of-cybersecurity-collaboration/100393/>> (Accessed September 12, 2024).

^{193/} Economic Diplomacy Divisio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Modi’s US visit: India, US announce deals to boost ties,” June 23, 2023, <<https://indbiz.gov.in/modis-us-visit-india-us-announce-deals-to-boost-ties/>> (Accessed September 12, 2024).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발판이 되고 있다.

라. 해양안보

인도의 해양안보 인식과 전략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내륙 국경 수비에 집중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적, 군사적 확장은 인도를 해양에서 전략적으로 포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인도는 자국을 둘러싼 해양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국제해양안보질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특히 인도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 인도 무역 물동량의 약 95%(금액 기준 74%)가 인도양의 12개 주요 항구와 205개의 중, 소형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다.^{194/} 따라서 해상 무역은 인도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인도는 해상 교통로의 안정성 없이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에 대응해, 인도 역시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인도 해군의 전략적 방향은 2015년 발표된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에 잘 나타나있다. 이 전략은 인도양에서의 지배적

^{194/} Anil Jai Singh, “India’s Maritime Economy: Driving India’s Growth,” *Articles and Commentaries, India Foundation*, February 27, 2021, <<https://indiafoundation.in/articles-and-commentaries/indias-maritime-economy-driving-indias-growth/>> (Accessed September 12, 2024).

위치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외부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는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해상 전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2년에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 INS Vikrant를 취역시켰다. 이러한 해군력의 확장은 인도의 해양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해상 경쟁에서 인도의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는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를 다국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쿼드는 인도양 및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다국적 협력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협력의 일환으로 말라바르 해군 훈련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말라바르 훈련은 1992년 인도와 미국 간의 해군 합동 훈련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일본과 호주가 합류하며 다국적 해양 훈련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훈련은 인도양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해상 활동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해양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으로 ‘해양 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가 2018년 12월에 출범시킨 중요한 해양안보 이니셔티브인 인도양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re - Indian Ocean Region, IFC-IOR)는 인도양의 해양영역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5/} 인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IFC-IOR은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파견된 연락 장교들이 센터에 상주하며 공동

^{195/} Information Fusion Centre, “About IFC,” <https://www.ifc.org.sg/ifc2web/app_pages/User/commonv2/aboutus.cshtml> (Accessed August 10, 2024).

운영하고 있다.^{196/} 그 밖에 인도는 대부분의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의 제로 해양안보를 포함시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감시하며, 해적 행위, 불법 어업, 테러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파트너들과도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양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Indian Ocean Group을 결성하여 해양안보와 재난 구호, 해적 방지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인도양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Maritime Securit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Information Fusion Centre-Indian Ocean Region (IFC-IOR) and the Regional Coordination Operations Centre (RCOC)," *Press Release*, February 22, 2023,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01371>> (Accessed August 10, 2024).

VI. 결론: 한반도에 대한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한반도에 대한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지금까지 유럽, 중동, 인도의 해당지역과 관련된 국제정세 및 국제질서 인식과 함께 각 국가 및 지역의 한반도 통일외교 환경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이들 지역의 한반도 통일외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한국이 앞으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유럽의 국제질서 인식 그리고 그에 기초한 대외정책은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유럽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다극체제로 인식하며, 전략적 자율성의 기초 하에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 기조는 유럽 자신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유럽이 스스로 국제질서의 하나의 중요한 축 또는 제3의 극(polarity)으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럽의 이러한 의도가 조기에 현실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탈냉전기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 이후 국제질서의 성격은 아직 안개 속이다. 다극적 질서로 전개될지, ‘극’이 없는 무극체제로 변모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유럽의 인식과 정책은 국제질서를 과거, 즉 냉전기 양극질서 및

탈냉전기 단극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는 국제관계의 경향성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한반도가, 아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과거와는 다른 국제질서 및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촉진하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의 항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동맹 복원의 기회가 되었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및 에너지 자원 등을 지원받고 전략무기 개발을 사실상 묵인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3년 한러 무역 총액은 2021년 대비 약 45% 급감했다. 러-우 전쟁이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우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및 유럽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지원 중단 시 유럽이 미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유럽이 독자적 지원에 나서지 않고 러-우 전쟁이 조기에 타협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러-우 전쟁 교착상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은 러-우 전쟁 관련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 즉 전쟁의 조기 종결 및 교착상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서 핵확산 방지와 군비통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정책 방향이 한국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잘 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가 필요한 점은 유럽이 군비통제와 군축을 지향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EU 자체의 방위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현재 직면한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이 중장기적으로는 군비통제와 군축을 추구하지만, 당면해서는 오히려 군비증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국제적 군비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전통 안보 문제 관련하여,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이 행정부별로 뚜렷한 차이(예: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 목표를 견지해왔다. 과거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상당한 영향력 혹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의 기후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관련 유럽의 대응은 최근 미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예: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등)과 관세정책(예: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을 추진하면서 촉진하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퇴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유럽은 미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정책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다자 통상 규범에서 벗어나 공급망의 재편, 중요기술 유출 차단, 산업보호금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유럽도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퇴조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197/}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더 경쟁적이며 보호주의적인 질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유럽이 추구하는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한반도 혹은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응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일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과거의 양극질서 혹은 단극질서와는 다른 성격과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 국가가 세계질서를 주도하기보다는, 여러 국가들 또는 국가들의 연합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경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혹은 전망 속에서 유럽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미러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 경쟁과 대립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고 한국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EU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한국 방위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U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197/ 이효영,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4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12.22.), pp. 1~30,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261&clCode=P01&boardSe=>> (검색일: 2024. 9. 6.).

중요한 조건은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의 확보이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율성 확대의 기초 하에 국방 예산의 증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자체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추세는 최근 성장세에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유럽 시장 확대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국방 분야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실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러-우 전쟁 종결 이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타협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지원·참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은 전쟁으로 큰 고난을 겪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일상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도주의적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에도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러 관계의 복원과 개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대립성을 완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한러 무역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럽과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 추구하는 핵확산 방지와 군비통제 및 군축, 궁극적 목표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 특히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일괄타결식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와 군축은 한반도에서 우선 긴장을 완화하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유럽이 공감하는 군비통제 및 군축 접근법을

매개로 한반도와 유럽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지지와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구축·강화하고 유럽과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는 도달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규범이 되었으며, 특히 유럽은 탄소중립 관련 제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자체적 필요성 뿐 아니라 유럽과의 무역 등 경제 협력을 위해서도 탄소중립 관련 제도와 기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반도 차원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위한 소재도 될 수 있다. 북한도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대응, 탄소중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 교류·협력의 한계가 뚜렷하다.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남북한 및 유럽의 삼자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모색해 볼 만하다.

여섯째, 미국의 정부 주도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유럽도 (미국에 비해 개방적이지만) 경제안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종식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내외 현실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의 경제안보 전략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디커플링 및 보호무역과 차별화되면서도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첨단 핵심기술과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등의 디리스킹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고찰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을 확장하여, 디리스킹 기조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 기반과 동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 대한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유럽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한반도 관련하여 핵비확산과 직결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상당히 떨어진다. 북한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내부 실상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가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한반도 안보 환경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관한 상호 간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문제 관련 유럽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북한 및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유럽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공공외교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동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중동의 정치 지형 속에서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단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대중동 정책이 단기적 경제 관계에 치중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동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동 간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198/}

더욱이,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중동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개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 강화를

198/ 김강석·이주성, “한국의 대중동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 『한국중동학회논총』, 제44권 1호 (한국중동학회, 2023), p. 21.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한국에게 중동 지역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대미 관계를 고려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중동 문제에 개입할 때는 민감한 역내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미국은 한국의 중동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개입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일례로 국제해양안보건설(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MSC)은 2019년 미국이 주도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고 해양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 해양안보 연합체이다. 2019년 IMSC 출범 당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은 대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선택해 2020년 초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임무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199/} IMSC에 대한 한국의 대응 사례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걸프만의 해양안보에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안보 협력 요청 상황에서 한국은 역내 국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홍해와 걸프만의 안보 문제는 걸프 국가들과 이란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안보 이슈에 개입할 때는 성급한 관여를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1월 한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급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했는데, 당시 다수 역내 국가들이 미묘한 역내 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주저했던 만큼, 한국은 중동 내 안보 문제에 참여할 때 중동 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이 지역의 해양안보 유지를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199/ 장성일, “해양안보를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 국제해양안보건설(IMSC) 활동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JPI PeaceNet』, 제8호 (제주평화연구원, 2023.9.21.), <<http://jpi.or.kr/?p=21484>> (검색일: 2024.9.30.).

한미 관계 속에서 최선의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00/}

반면, 안보 문제와 달리 지역 안정을 위한 재건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자지구 재건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인들의 우호적 감정을 고려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자 전쟁이 휴전되고, 포스트 하마스 가자지구 구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재건 논의에 더 큰 기여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

따라서 한국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더 큰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자지구 재건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 시나리오로 다국적 권위체(MNA)에 의한 가자지구 통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G20 국가와 같은 글로벌 중견국들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20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종전 후 가자지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구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중동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례로, 한국은

200/ 김강석,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전망과 한국의 정책,” EAI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EAI 동아시아연구원, 2024.1.16.),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303&&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4.8.22.).

201/ Jean-Pierre Filiu, “Why Gaza Matters: Since Antiquity, the Territory Has Shaped the Quest for Power in the Middle East,” *Foreign Affairs*, January 1,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israel/why-gaza-matters>> (Accessed September 5, 2024).

202/ Keith Dayton et al., “Plan for Postwar Gaza,” *Wilson Center Middle East Program*, May 7, 2024,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plan-postwar-gaza>> (Accessed July 30, 2024).

서울 AI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선도해 나가려는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규범 정립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미중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걸프 국가들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오히려 중견국인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선호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과학기술과 AI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도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동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GCC 국가들은 헤징을 추구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즉,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GCC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양자택일의 정치적 선택보다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GCC국가들의 노력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다각적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재 중동 산유국들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창출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핵에너지, 탈탄소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수자원, 식량안보,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했다.^{203/} 이러한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다차원적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관련해서 한국과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정세변화와 이에 따른 대외정책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인도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중간국가로서 지난한 역사를 헤쳐 오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양국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국가를 인접하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거칠고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전략적 이해 수준을 높이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에 대응하는 인도의 전략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는 국경을 무력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해양으로의 세력 투사를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중국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외적균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단일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약해진 점을 인식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며 기존의 질서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203/ 김강석, “새로운 협력 기회를 품고 중동시장이 다가온다,” 『나라경제』,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3),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217&sel_year=2023&sel_month=03> (검색일: 2024.9.22.).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인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국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인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미 협력을 확대하는 대외정책의 기초를 세운 것을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인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미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주요 협력 플랫폼은 쿼드, 말라바르 연합훈련, 인도양 정보융합센터, 국제태양광연합(ISA) 등으로 다양하다. 인도의 전략적 지향이 우리와 큰 맥락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협의체에 대한 참가 여부와 수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면 인도를 위시한 협의체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특정한 양자 간의 의제에 한하여 작동했던 인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넓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접근이 될 것이다.

반면 본고는 인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전략에 있어 서구와는 거리를 둔 인도만의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같은 인도식 접근이 인도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및 이로 인해 형성된 대외정책의 기초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인도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인도는 언제나 평화의 편에 서 있다”는 자긍심과 바라트 정신에 기반한 외교 전략을 국제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와 국제사회를 무대로 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인도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핵심적인 대외전략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국은 중-인 국경분쟁 등 서로의 직접적인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는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 미사일 기술의 파키스탄 이전에 반대하는 인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은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및 북한과의 무기 교류를 반대하는 인도와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204/} 북한 비핵화는 인도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는바, 북한-중국-파키스탄-이란 간의 핵 관련 교류 네트워크는 인도에게도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북한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북한-파키스탄 간 무기체계 관련 협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05/} 미국의 압력에도 인도는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나아가 북한의 발전을 돕는 역할도 기대해 봄직하다.

인도와 당장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볼 만한 분야들도 있다. 방산 협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이다. 2024년 기준 인도는

204/ 최윤정,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세종정책브리핑』, 제26호 (세종연구소, 2018.12.20.),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3&itm=0&txt=%EC%8B%A0%EB%82%A8%EB%B0%A9&pg=1&seq=4582>> (Accessed September 30, 2024).

205/ Jagannath Panda, “India’s Ties to North Korea: Can New Delhi Overcome Challenges to Its Maturing Engagement?,” 38 North, Stimson Center, September 30, 2020, <<https://www.38north.org/2020/09/jpanda093020/>> (Accessed September 30, 2024).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206/} 파키스탄과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와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인도의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동기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인도와는 그중에서도 한국이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산업과 전투훈련기(fighter aircraft trainer) 협력이 유망하다.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도의 비전 속에서도 한국은 유망 협력 국가이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메이크 인 인디아’와 이를 국가 주도의 경쟁력 육성 프로젝트로 발전시킨 ‘자립인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오랜 시간 지켜온 세계의 공장 공급망의 중추적 지위가 미중 전략경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인도는 자국의 산업 고도화 및 세계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도가 중점 육성하는 분야 중에서 한국과 전자·반도체(Electronics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ESDM),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섬유, 식품가공, 방산 협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207/}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보완하는 미래의 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재 양국은 2010년에 체결했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CEPA를 상호호혜적으로

^{20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SIPRI Fact Sheet*, March 11, 2024,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24/sipri-fact-sheets/trends-international-arms-transfers-2023>> (Accessed September 30, 2024).

^{207/} 최윤정,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p. 18.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CEPA를 넘어서는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현재 인도와 추진하는 대표적인 소다자 협의체인 한-미-인 3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인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우주 탐사, 방위기술, 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주 기술은 인도가 상업화 뿐만 아니라 국방력 증강의 차원에서도 공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 우위 분야다. 미국과 인도는 이미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출범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 한-미-인 3각 협력의 경우 2024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인도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한국과 인도 양국에 모두 큰 타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지해 온 해양의 질서가 중국의 공세적 해양 진출로 흔들린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무역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해양협력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 보호, 해적활동 금지, 항행의 자유지지, 해양영역인식 등 한국의 참여가 용이한 분야부터 인도, 동남아와 같은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해양영역인식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보습득과 공유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 인도양 정보융합센터 활동에 참여하거나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의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 작업반 참여도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 단행본

김정섭. 『세계의 전쟁: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파주: 프시케의 숲, 2024.

이수형.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김상기 외.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2.

이태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적 시각과 서방적 시각 비교 고찰』.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통일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편. 『질서의 충돌, 움직이는 패권』. 서울: 박영사, 2022.

Indian Navy.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New Delhi: The Directorate of Strategy, Concepts and Transformation, Integrated Headquarters, Ministry of Defence(Navy), 2015.

Jaishankar, Subrahmanyam. *The India Way: Strategies for an Uncertain World*. India, Noida, Uttar Pradesh: Harper Collins, 2020.

_____. *Why Bharat Matters*. New Delhi: Rupa Publications India, January 3, 2024.

Nehru, Jawaharlal. *The Discovery of India*. Penguin Random House; 2nd edition, October 31, 2004.

Singh, Bhuhindar and Sarah Teo. *Minilateralism in the Indo-Pacific: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Lancang-Mekong Cooperation Mechanism, and ASEAN. London:
Routledge, Abingdon, Oxon, May 26, 2020.

나. 논문

- 강선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60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 강유덕. “경제안보 패러다임에 따른 EU의 위험완화(de-risking) 전략: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의 연결성과 향후 도전과제.” 『유럽연구』. 제42권 1호, 유럽연구학회, 2024.
- 김강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배경과 주요 쟁점.” 『중동문제연구』. 제23권 2호,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2024.
- 김강석·안소연. “에너지 안보환경 변화와 EU, 러시아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42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2023.
- 김강석·이주성. “한국의 대중동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44권 1호, 한국중동학회, 2023.
- 김시홍.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다극화, 전략적 자율 그리고 인도태평양.” 『EU연구』. 제5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 김용민. “AUKUS 출범으로 변화하는 유럽안보 -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제40권 1호, 한국유럽학회, 2022.
- 윤성욱. “유럽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EU의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이승근.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 질서의 변화.” 『유럽연구』. 제41권 1호, 한국유럽학회, 2023.
- 이혜정.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해.” 『한국과 국제정치』. 제16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 _____.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한국정치연구』.

- 제30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 이효영.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4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12.22.
- 전혜원.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2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8.4.
-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 조은정. “프랑스·독일의 안보 전략서 개편 동향 및 전략적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23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11.27.
- 조홍식. “유럽연합의 대미 정책과 새로운 대서양 시대.” 『외교』. 제137호, 한국외교협회, 2021.
- 차태서. “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국제·지역연구』. 제32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 최윤정. “신냉전 시대 인도의 외교적 선택과 전략적 자율성.” 『세종정책브리프』. 제17호, 세종연구소, 2022.9.20.
- _____.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인도 협력.” 『외교』. 제145호, 한국외교협회, 2023.4.
- 최원기. “AUKUS 안보협력: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3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3.21.
- 千々和泰明氏. “戦争終結の理論: 平和の回復をめぐるジレンマ.” 『国際政治』. 日本国際政治学会. 第195号, 2019.
- Bazooband, Sara. “Iran’s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Middle East Policy*. vol. 31, issue 1, February 14, 2024.
- Breslin, Shaun. “Leadership and Followership in Post-Unipolar

- World: Towards Selective Global Leadership and a New Functionalism?." *Chinese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 2017.
- Layne, Christopher.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issue 1, 2012.
- Mearsheimer, John J.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kraine War." *Horiz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mmer, no. 21, 2022.
- Tow, William. "Minilateral security's relevance to U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Challenges and prospects."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2, 2018.
- Weitz, Rockford. "Strategic Maritime Chokepoints: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Shipping and Port Sectors." In *Eurasia's Maritime Rise and Global Security*, Palgrave Studies in Maritime Politics and Security, edited by Geoffrey F. Gresh, Palgrave Macmillan, Cham, 2018.

다. 기타 자료

- 『노컷뉴스』.
- 『뉴시스』.
- 『서울경제신문』.
- 『세계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KBS』.
- 『MBC』.

BBC.
China Daily.
Financial Times.
France 24.
Hindustan Times.
India Today.
News on Air.
Reuters.
Tehran Times.
The Economic Times.
The Guardian.
The Hill.
The Jerusalem Post.
The New Arab.
The Siasat Daily.
The Times of Israel.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shington Post.
TIME.
Times of India.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s://dream.kotra.or.kr>>.
동아시아연구원(EAI) <<https://eai.or.kr>>.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http://www.snuiis.re.k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wac.snu.ac.kr>>.
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

- 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 Global NK: Zoom & Connect <<https://www.globalnk.org>>.
- GS칼텍스 미디어허브 <<https://gscaltexmediahub.com>>.
- Ahmed Asmar <<https://www.aa.com.tr/en>>.
- Airforce Technology <<https://www.airforce-technology.com>>.
- Aljazeera <<https://www.aljazeera.com>>.
- Arab Youth Survey <<https://arabyouthsurvey.com>>.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
-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mfa.gov.cn>>.
- CIO.com <<https://www.cio.com>>.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
- DW.com <<https://www.dw.com>>.
- East Asia Forum <<https://eastasiaforum.org>>.
- Economic Diplomacy Divisio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https://indbiz.gov.in>>.
- Emirates News Agency WAM <<https://www.wam.ae>>.
- Emirates Policy Center <<https://epc.ae/en>>.
- EU <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
-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
-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ecfr.eu>>.
- Express Computer <<https://www.expresscomputer.in>>.
-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
-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
- Fortune.com <<https://fortune.com>>.
- General Secretariat for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of French

- Republic <<https://www.sgdsn.gouv.fr>>.
- Government of India, Defence Research & Development organisation,
Ministry of Defence <<https://drdo.gov.in>>.
- Government of India, Ek Bharat Shreshtha Bharat <<https://ekbharat.gov.in>>.
- Government of India,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Department of Space <<https://www.isro.gov.in>>.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Defence <<https://www.ddpmod.gov.in>>.
- Government of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https://pib.gov.in>>.
- Gulfbusiness.com <<https://gulfbusiness.com>>.
- India Foundation <<https://indiafoundation.in>>.
- Information Fusion Centre <<https://www.ifc.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 Khamenei.ir <<https://english.khamenei.ir>>.
-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https://www.ifw-kiel.de>>.
-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KAPSARC)
<<https://www.kapsarc.org>>.
- Make in India <<https://www.makeinindia.com>>.
-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mecouncil.org>>.
-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https://www.mea.gov.in>>.
- 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https://www.nationalesicherheitsstrategie.de>>.
- NATO <<https://www.nato.int>>.
-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https://www.orfonline.org>>.
- Qantara.de <<https://qantara.de/en>>.
-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 〈<https://www.ris.org.in>〉.
- Stimson Commentary 〈<https://www.stimson.org>〉.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 Tallberg Foundation 〈<https://tallbergfoundation.org>〉.
-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https://agsiw.org>〉.
- The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
-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
-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https://www.eeas.europa.eu>〉.
- The Financial Express 〈<https://www.financialexpress.com>〉.
-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https://www.rusi.org>〉.
-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english.www.gov.cn>〉.
-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
- The White House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 U.S.-UAE Business Council 〈<https://usuaebusiness.org>〉.
- Wilson Center Middle East Program 〈<https://www.wilsoncenter.org>〉.
-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worldbank.org>〉.
- X.com 〈<https://x.com>〉.
- 38 North 〈<https://www.38north.org>〉.

조은정. “인도태평양 시대 유럽의 국가전략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열린 연구토론회 발표자료, 2024.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욱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감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근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사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2024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4-01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정성윤 외
2024-02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김갑식 외
2024-0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이규창 외

2024-04	북한주민의 시장생활	나용우 외
2024-05	북한주민의 군대생활	서보혁 외
2024-06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김상기 외
2024-07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김상기 외
2024-08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중·러·북의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김진하 외
2024-09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김진하·현승수
2024-10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최지영·이지순
2024-11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이지순 외
2024-12	자유민주주의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한동호 외
2024-13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해외 자원: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민태은
2024-14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과 대응: 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이용재 외
2024-15	KINU 통일의식조사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미국의 대선 전망에 대한 여론 이상신 외	이상신 외
2024-16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김민성 외
2024-17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이행방안: 민생협력과 그린데탕트	홍제환 외
2024-18	新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주화 외
2024-19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조한범·정유석
2024-2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통일문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김석진·홍제환
2024-21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박영자 외
2024-22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4-01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김진하 외
2024-02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홍수환 외
2024-03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홍철기
2024-04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 신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KINU Insight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2023-01	제 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과 북중관계 전망	전병곤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북한인권백서 2024

이우태 외
이무철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통일정책연구, 제33권 1호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3, No. 1 (2024)
통일정책연구, 제33권 2호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3, No. 2 (2024)

기타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통일연구원

